

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11

2025 NOVEMBER

VOL. 107

어느 누구나,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고 싶은 일을 안전하게 오래도록 할 수 있게 재정이 돕습니다.



Theme Story

어느 누구나 나이나 성별, 조건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을
언제든, 어디에서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재정의 역할입니다.

재정 INSIGHT

04 통계로 보는 FIS 인사이트

고용 부문 예산

08 이달의 재정 VOCA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10 재정칼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재정지원 방향

박승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직업훈련 강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보 방안

황성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래인재연구본부장

재정 NOW

24 숫자로 보는 재정동향

2025년 9월 기준 재정동향

26 해외재정동향

주요국 및 국제기구 재정동향

38 재정 캘린더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2288-6200 홈페이지 www.fis.kr 발행인 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센터 | 02-6908-8652 기획·디자인·인쇄 (주)디자인여백플러스 | 02-2672-1535



재정 NAVIGATION

- 40 **예술사 속 재정경제 이야기**
하늘 제사의 벼에서 유래한 관청, '사도시'
- 46 **현실 속 재정제도 이야기**
예산항목과 예산권한: 예산의 전액 편성
- 52 **재정이 MONEY**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대한민국은
'고령 친화 사회'의 준비가 되어있는가?
- 56 **플랫폼이 된 도시**
토론토, 가장 이주하고 싶은 도시가 되기까지
- 62 **서울 남산공원의 여섯 위인**
퇴계 이황
- 64 **이달의 재정경제 도시**

FIS 재정

- 66 **FIS 재정 알리미**
부정수급 현장점검
- 68 **재정원 소식**
- 70 **애독자 코너**





통계로 보는

고용 부문 예산

글·우수연 재정정보분석센터 연구원

2026년도 예산안 편성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회복과 성장의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은 전년 대비 20.4조 원 증가한 269.1조 원으로, 그중 고용 부문에서는 고용 안전망 확충과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고용 부문 예산은 일자리 창출 차원을 넘어, 급속한 고령화와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른 격차 발생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한다.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고용 부문의 지출은 2029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이나,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9.5%에서 2029년 8.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2029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고용 부문 지출 계획 |

(단위: 억 원,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연평균 증가율
보건·복지·고용	2,487,466	2,691,411	2,855,223	3,005,654	3,134,729	6.0
고용	235,801 (9.5)	249,402 (9.3)	254,769 (9.0)	260,128 (8.7)	265,315 (8.5)	3.0 -

주: 괄호 내 수치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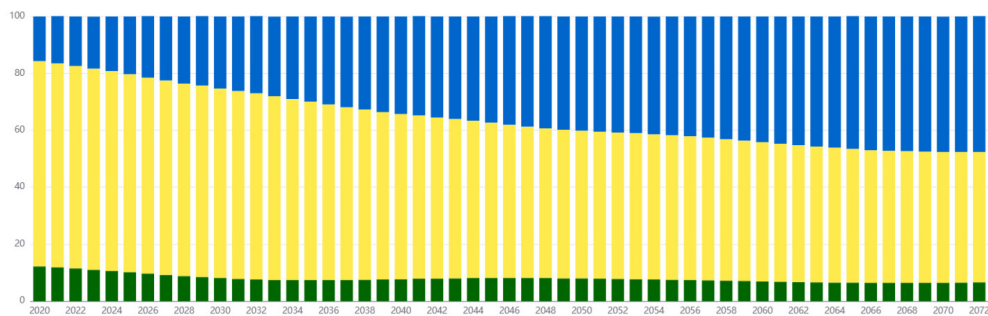
올해 7월 발표된 OECD 「2025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2025)」 보고서에서도 세계적으로 수명이 길어지고 출산율이 하락하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감하는 현상을 주요 경제 리스크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노동공급 기반이 축소되고 있으며, 고령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참여 확대와 생산성 제고가 필수임을 언급했다. 한편, 2060년까지 OECD 회원국의 고령 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약 6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별한 정책 변화가 없다면 1인당 GDP 성장률이 매년 0.4%p 둔화할 것이며, 한국은 그중에서도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3,664만 명에서 2024년 3,562만 명으로 줄었다. 한국의 고용률은 2023~2060년 사이 8.1%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OECD 평균 감소폭(-1.9%)의 4배 이상이다. 이러한 통계는 청년층 인구 감소와 고령층 비중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구조적 변화를 보여준다. 한국의 노동공급 기반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단기 일자리정책보다 노동시장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점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및 고령층 인구 추이(2020-2060) |

■ 유소년 인구 (14세 이하) ■ 생산가능인구 (15~64세) ■ 고령인구 (65세 이상)

(단위: %)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	2060
유소년 인구 (14세 이하)	12.2	11.9	11.5	11	10.6	10.2	9.7	9.2	8.8	8.5	8.1	...	6.9
생산가능인구 (15~64세)	72.1	71.6	71.1	70.7	70.2	69.5	68.8	68.3	67.6	67.2	66.6	...	48.9
고령 인구 (65세 이상)	15.7	16.6	17.4	18.2	19.2	20.3	21.6	22.5	23.6	24.4	25.3	...	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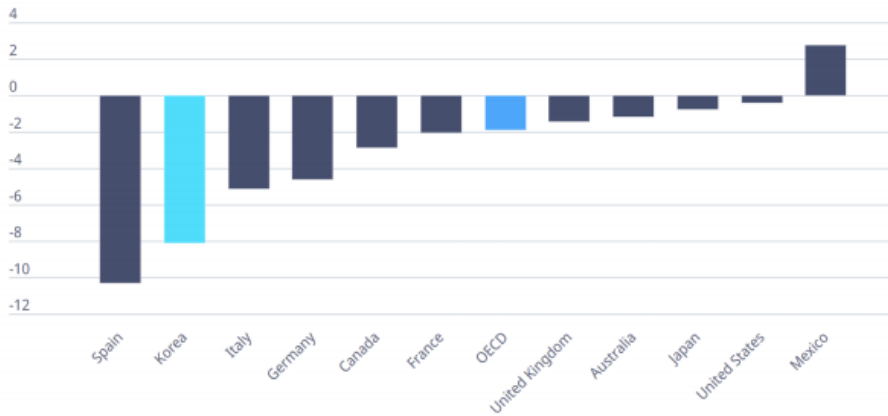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2026년도 예산안에서 고용정책 전반의 체계를 조정했다. 중점 분야는 ▲산업안전 ▲일가정 양립 지원 ▲고령자 재취업 활성화 ▲신기술 중심 직업 훈련 개편이다. 특히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등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투자가 강화되었으며, 정년연장형 고용·고령자 사회공헌활동 등 생애주기형 일자리 정책이 확대됐다. 또한 육아휴직제도 개선, 유연근무제 도입, 주 4.5일제 지원 등 가족친화형 근로정책도 반영되었다. 이와 같은 방향성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및 인적자본 축적이라는 중장기 목표와 일관되며, OECD가 제시한 근로수명 연장을 위한 대응전략(평생학습, 유연근로, 여성참여 확대 등)과도 일치한다.

한국의 중장년층(55~64세) 인구와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참여가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일정 부분 뒷받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OECD는 한국, 일본, 멕시코를 '실제 은퇴 연령이 법정 정년보다 높은 국가'로 분류하며, 특히 한국의 경우 남성 3.4년, 여성 5.4년의 차이를 보여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분석했다. 정부 또한 관련 예산 편성을 통해 정년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재취업 지원·직무전환 교육·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OECD는 노년층 고용유지를 위해 건강한 근로환경, 유연한 근로시간, 포용적 고용 관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OECD 주요국 고용률 감소 전망(2023-2060) |

Projected changes in the employment-to-population ratio, 2023-60, baseline scenario, percentage points



Source: Chapter 2 in OECD Employment Outlook 2025: Can We Get Through the Demographic Crunch?, <https://doi.org/10.1787/194a947b-en>.

자료: OECD, 「2025 고용 전망(Employment Outlook 2025)」, 2025.7.

2026년도 고용 부문 예산안은 고령층의 노동참여 유지, 일·가정 양립 지원, 청년층의 산업 전환 대응력 제고, 이민·외국인력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편성되었다. OECD는 한국의 고령층 고용률이 높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노동력 감소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여성과 청년층의 참여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맞게 정부 또한 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 유연근무제 확산, 보육 인프라 확충,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산재예방 투자 확대 및 고용안전망 강화 주요 사업

| 산재 예방시설·안전인력 투자 강화 1.3 → 1.5조 원 |

사업명	2025년	2026년안	주요 내용
클린사업장조성지원	4,818	5,371	•영세사업장 등 시설지원(1.7만 개소) 등 - (50인 미만 등, 보조 최대 80%) 11,865개소 - (10인 미만 등, 보조 최대 90%) 5,593개소
산재예방시설 용자	4,588	5,388	•용자지원 물량 확대(2,600→3,054개소)
안전보건 컨설팅	637	820	•컨설팅 물량 확대(3.35→3.5만 개소)
안전한 일터지킴이	-	446	•일터 지킴이 1천 명(직접 800+위촉 200명)
신고 포상금	-	111	•규칙 위반(50만 원), 고의적 법 위반(500만 원)

|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 확대 2.3 → 2.8조 원 |

사업명	2025년	2026년안	주요 내용
체불임금 대지급	5,293	7,465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도산 시 최대 6개월)
장애인 근로지원인	2,470	2,659	•근로지원인 확대(11,000→11,500명)
워라밸 + 4.5 프로젝트	-	277	•주 4.5일제 도입 중소기업 장려금(257억 원) •주 4.5일제 고용창출 장려금(20억 원)
육아기 10시출근제	-	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 100% 보전 사업주 지원(월 30만원, 0.2만 명)
근로감독관 업무지원	172	1,126	•신규 근로감독관 업무지원

| 구직촉진수당 50→60만 원 12.4 → 13.3조 원 |

사업명	2025년	2026년안	주요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8,457	10,129	•구직촉진수당 월 50→60만 원 등
구직급여	109,171	115,376	•지급단가 +2.9%, 지원인원 확대 등
일손부족 일자리동행 인센티브	-	18	•은퇴 중장년 연 0.1만 명 대상

이달의 재정 VOCA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 종목은 총 25개입니다. 먼저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인 과세주체(과세권자)를 기준으로 조세체계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에서 과세권을 갖는 국세 세목이 14개이고, 지방정부가 과세권을 갖는 지방세 세목이 11개입니다. 국세는 다시 과세대상 물품의 국경 통과 여부를 기준으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의 과세권은 국세와 다르게 세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며, 특별시, 광역시 및 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에 해당하는 도세(취·등록세 등 총 6개 세목)와 그 외 도의 관할 구역에 설치된 시, 군 및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 세목에 해당하는 시·군세(담배소비세 등 총 5개 세목)로 구성됩니다.

다음으로 징수한 조세 수입 용도의 특정 여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세는 조세 수입의 용도에 대한 특정 없이 일반적인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조세로, 대부분의 국세와 지방세 세목이 보통세에 해당합니다. 반면 목적세는 해당 조세 수입의 용도가 법률에 특별하게 지정된 조세입니다. 현행 국세 중 목적세는 총 3개로 교육세(교육재정 확충), 교통·

에너지·환경세(교통시설 확충, 에너지 관련 사업, 환경보전 및 개선사업), 농어촌특별세(농어촌산업기반시설 확충 등)가 있고, 지방세는 지역자원시설세(지역개발사업 재원 및 소방사무 제반비용 확충)와 지방교육세(지방교육재정 확충)가 있습니다.

그 외 조세부담의 경제적 귀착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납세의무자와 실제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세는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실제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대표적입니다. 간접세는 조세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전가되는 조세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대표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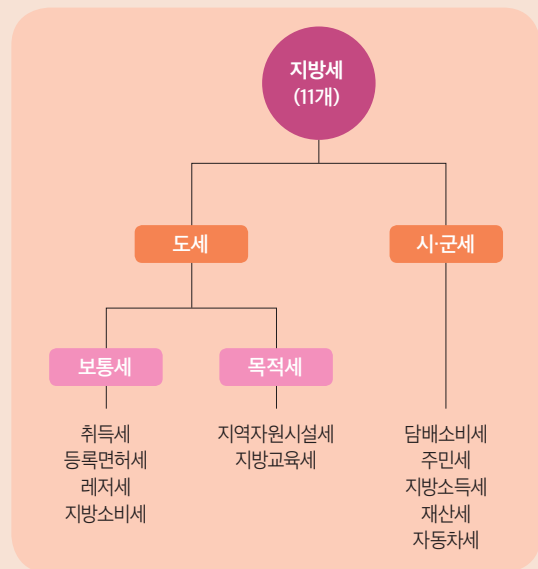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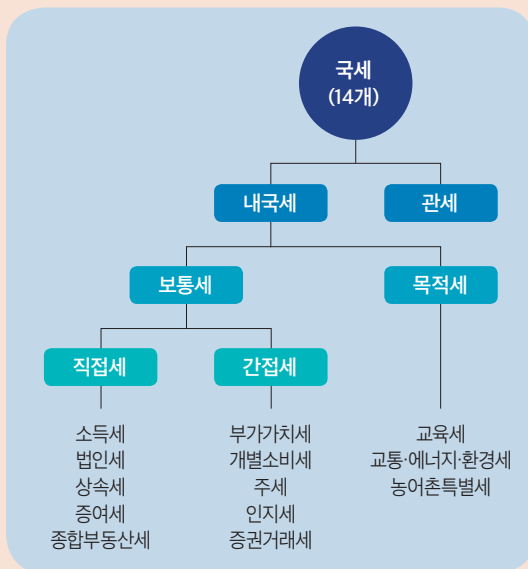
OECD의 조세 분류 체계

OECD는 회원국 간 조세통계의 비교·분석을 위해 조세를 부과하는 대상(Tax Sources¹⁾)을 기준으로 ①소득 및 이윤에 대한 조세(income and profits) ②재산에 대한 조세(property) ③

소비에 대한 조세(consumption) ④기타 조세(other taxes)로 조세를 분류합니다.

동 기준으로 우리나라 조세를 분류하면 소득 등에 대한 과세로는 소득세와 법인세, 재산 과세로는 상속·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소비 과세로는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OECD 조세분류 체계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세 분류

구분	내용
소득과세 (income and profits)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소득세·법인세 감면분)
재산과세 (property)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분)
소비과세 (consumption)	부가가치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관세, 교육세(주세·교통세·개별소비세·금융보험업자 수입분), 농어촌특별세(개별소비세·관세감면분)
기타 (other taxes)	과년도 수입

※ 자료: 조세개요, 기획재정부, 2025(원자료: Revenue Statistics, OECD)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물건, 행위, 사실로 세원(稅源)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소득, 소비(또는 지출), 자산(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재정지원 방향

박승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환경안전보건 수준이 높아져가나 안전과 보건의 정착을 위해서는 재정지원 필요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경제적 손실과 근로손실일수 매년 증가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확대 필요
 취약계층의 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과 국가 재정 투입 및 안전문화 정착 절실

- 2024년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로 OECD 평균인 0.29와 격차
- 2024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38조 원으로 국가예산의 5.8%
-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누적 3억 759만 일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종합 노동자 건강관리 체계
Total Worker Health(T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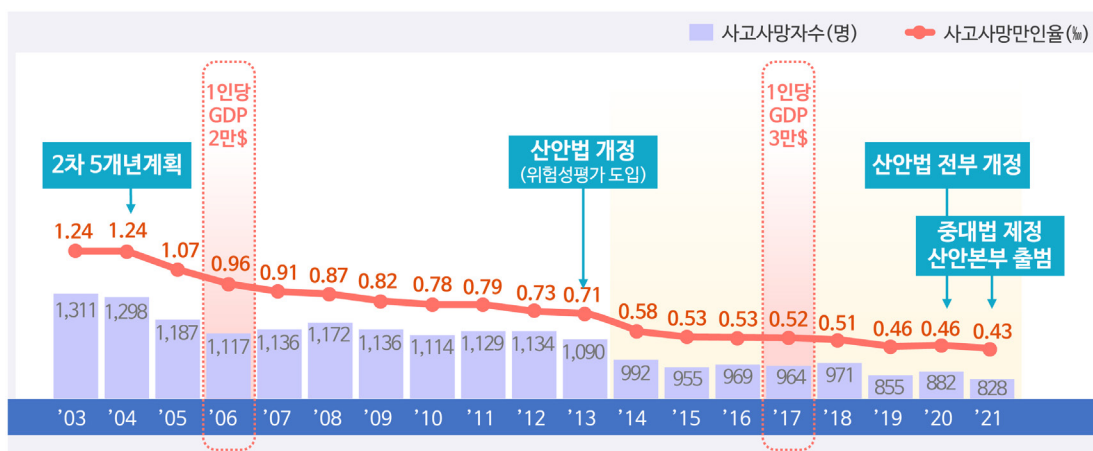


- ▶ 일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 ▶ 근무시간, 업무량, 동료 및 관리자와의 상호 관계가 개인의 비만,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우울증 등에 영향
- ▶ TWH를 통해 다양한 노동조건에 기초하여 노동자를 위험으로부터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
- ▶ TWH를 통해 노동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安康한 상태로 질병 예방 및 사고성 재해 예방

1. 안전보건의 일반화 필요성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개인의 생명과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고, 사회적 갈등,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 <그림 1>은 연도별 사고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상시 근로자 만명 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2004년 제2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추진, 2013년 위험성평가제도 도입, 영세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지원, 고위험 사업장 관리·감독 등을 통해 사고사망만인율(‰)을 2003년 1.24에서 2021년 0.43까지 1/3수준으로 낮추었다. 그리고 2024년 현재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로 조금 더 낮은 상태이다. 그러나 OECD 평균인 0.29와는 아직 많은 격차가 있다.

그림 1 연도별 사고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추이



자료 : 고용노동부.

한 나라의 환경안전보건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소득 수준과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박두용, 2016)¹⁾.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넘어가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이 일반화된다. 그리고 2만 달러가 넘어가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당연히 지켜야 할 것으로 여기게 된다. 그리고 경제 수준이 높아져서 3만 달러가 넘어가면 건강 문제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고 보건의 일반화된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이슈는 환경이 일반화되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주었고, 세월호 참사는 과연 우리가 안전의 시대에 있는가를 의심케 할 정도로 큰 충격이었다.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들어섰으나 아직도故김용균 사고를 비롯하여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재래형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어서 안전이 일반화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전 세계는 직업성 암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비롯해 직무스트레스, 정신건강, 종합적인 노동자 건강관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안전과 보건의 일반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이를 위한 적절한 재정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1) 박두용(2016), "안전보건, 이제 우리도 3만불 시대로 전환하자", 『산업보건』 2016년 10월호, 대한산업보건협회.



2. 2024년도 산업재해와 경제적 손실

2024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근로자 수는 총 21,420,560명이었고 재해자 수는 142,771명으로 재해율은 0.67%이었으며, 사망자 수는 2,098명으로 사망만인율은 0.98‰이었다. 이중 건설 현장 등에서 떨어짐, 중장비 등에 부딪힘, 기계설비에 끼임, 계단에서 넘어짐 등으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827명이고, 사고사망 만인율은 0.39‰이다. 2025년 9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의하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024년 기준 38조 원에 달하며, 이는 국가 예산의 5.8%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산업재해로 인한 최근 5년간 경제적 손실 누적 규모는 170조 원으로 추정되었고, 근로손실일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2020년 5,534만 일에서 2024년 6,720만 일로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누적 근로손실일수는 3억 759만 일에 이른다. 참고로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최근 5년 평균 약 44만 일(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이었다.

표 1 2024 산업재해 현황

구분	근로자 수(명)	재해자 수(명)	재해율(%)	사망자 수(명)	사망만인율(‰)
2024년	21,420,560	142,771	0.67	2,098 (사고사망: 827, 질병사망: 1,271)	0.98 (사고사망: 0.39, 질병사망: 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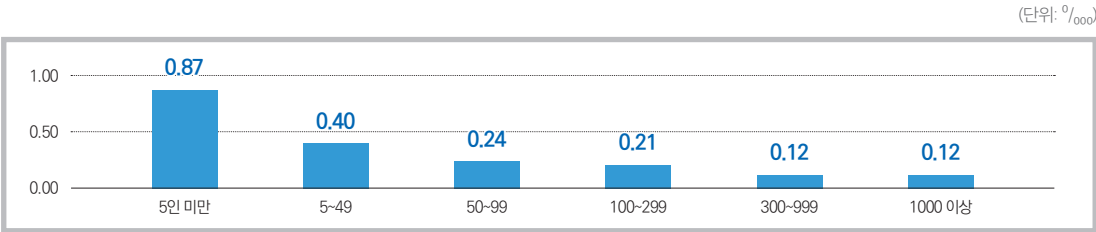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3. 사망만인을 세부 분석

사업장 규모별 사고사망만인율

<그림 2>는 2024년도 사업장 규모별로 사고사망만인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87‰로 전체 평균인 0.39‰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영세사업장의 경우는 정부에서 작업환경 관리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2 2024년도 사업장 규모별 사고사망만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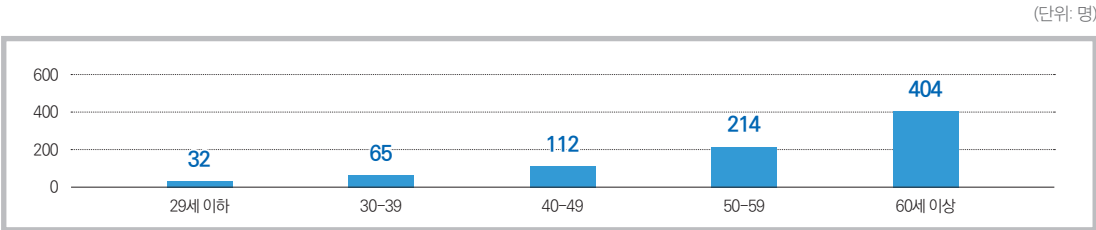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연령별 사고사망만인율

<그림 3>은 2024년도 사고사망자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이고, <표 2>는 2024. 8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연령별 임금근로자 수이다. 산업현장에서 50세 이상의 중고령노동자 수는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50세 이상에서의 사고사망자 수는 618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의 사고사망자 수는 404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의 49%를 차지한다.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중고령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 관리와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그림 3 2024년도 연령별 사고사망자 수



자료 : 고용노동부

표 2 연령별 임금근로자 수

(단위: 천명)

구분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수	3,548	4,729	4,908	4,925	4,033

주 : 임금근로자: 취업자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4. 8 기준.

재해발생 형태별 사고사망자

재해발생 형태별 사고사망자를 살펴보면 떨어짐(추락)으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278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의 33.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파열 등의 순이었다. 이들 사망재해의 경우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전조치 없이 작동 중인 기계설비에 접근하였거나, 안전대나 안전모 등의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작업자에게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위험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외국인 및 노무제공자의 사고사망 현황

국내에 장·단기로 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 자료(국가데이터처, e-나라지표)에 의하면 최근 3년간의 체류 외국인 수는 불법체류자를 제외하면 2022년 224만여 명, 2023년 250만여 명, 2024년 265만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국가데이터처(통계청)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조사한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4년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여 명이며 이들 중 취업자는 64.7%로 101만 명에 달한다. <표 3>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고사망 현황 자료에 기초하여 최근 4년간의 연도별 외국인 노동자 사고사망자 수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2024년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외국인은 102명이었고 2024년 외국인 취업자 수는 101만 명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사고사망만인율을 계산해 보면 1.01‰이다. 이는 2024년도 우리나라 전체 사고사망만인율인 0.39‰의 2.6배에 달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언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안전교육이나 유해·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와 적절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표 3 외국인 노동자 사고사망자 현황(2021~2024)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고사망자 수	102	85	85	102

자료 : 고용노동부, “2024년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보도자료 2025. 4. 30.

<표 4>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고사망 현황 자료에 기초하여 최근 4년간의 연도별 노무제공자 사고사망자 수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노무제공자의 경우는 퀵서비스,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등 주로 교통사고와 뇌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자가 많았으며, 사망자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플랫폼종사자 수는 2021년 66만여 명, 2022년 79만여 명, 2023년에는 88만여 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전체 플랫폼종사자 중에 인원이 가장 많은 직종은 배달·운전 직종으로 전체 종사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배달·운전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표 4 최근 4년간 노무제공자 사고사망자 수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36	63	83	101
퀵서비스	18	39	38	35
화물차주	9	7	22	44
특수화물차운전원	0	0	0	2
건설기계종사자	7	14	15	10
대리운전기사	1	0	4	8
택배기사	1	3	3	2
방문판매원	0	0	1	0

자료 : 고용노동부, “2024년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보도자료 2025. 4. 30.

업무상질병 사망자 현황 및 종합적인 노동자 건강관리의 필요성

2024년 업무상질병 사망자 수는 1,271명이었으며 진폐로 인한 사망이 50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뇌심혈관질환, 직업성 암, 화학물질 및 석면, 정신질환 등이었다. 진폐의 경우는 무연탄 채취 등 광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많았고 이외에는 건설공사, 석공품 제조, 도자기 제조 등에 종사하셨던 분들이었다. 진폐의 경우는 주로 과거 석탄분진과 같은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영향이 크다. 따라서 직업성 암과 같이 미래에 우리 사회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고민과 예방을 위한 투자가 필요해 보인다. 뇌심혈관 질환의 경우는 코로나 직무스트레스, 기초 질환의 악화 등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고, 직업성 암의 경우는 폐암 등 호흡기계 암으로 사망한 경우가 많았고 이외에는 백혈병 등 혈액 관련 암과 위암 등이 있었다. 그리고 유기용제, 중금속 등 화학물질과 석면 노출로 인한 사망자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16 Occupational Carcinogens Collaborators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2016년에 직업성 발암물질 노출에 기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349,000명이 사망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모든 암 사망의 3.9%(3.2%~4.6%)에 해당한다. 주요한 직업성 발암물질은 석면, 간접흡연, 실리카, 디젤엔진배출물 등이었다. 또한 WHO(국제보건기구)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전 세계적으로 2,000만 건의 암이 발생하였고, 970만 명이 암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22년 암 발생자 수는 282,047명이었고 암 사망자 수는 83,378명이었다(국가데이터처, e나라지표). 전 세계의 직업성 암 사망자 추정치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 사망자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암 발생이나 암 사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직업성 발암물질 노출로 인한 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직업적 유해요인에 의한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것에 더해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기초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서는 Total Worker Health(TWH)라고 하는 종합적인 노동자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NIOSH TWH의 기본 개념은 일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Work is social determinant of health)이라는 것으로 근무시간, 업무량, 동료 및 관리자와의 상호

관계 등의 다양한 직무 관련 요소가 과거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여겨졌던 개인의 비만,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우울증 등과 같은 건강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TWH를 통해 다양한 노동조건(working condition)에 기초하여 노동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TWH를 통해 노동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녕한 상태에 있다면 질병 예방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사고성 재해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4. 기후변화 대응과 스마트기술의 활용 필요성

ILO(국제노동기구), WHO 등의 자료에 기초하여 기후위기와 노동자 건강권에 대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기후변화는 폭염, 대기오염 등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옥외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이주노동자, 고령 및 여성 노동자 등은 노출과 취약성이 중첩되기 쉽다(이아람·박정임, 2025)²⁾. 본 논문에서 분석한 기후변화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①폭염 등 고온환경에 의한 물리적 위험, ②자외선 노출 증가와 피로 및 시력 영향 ③폭우, 폭풍, 가뭄, 한파 등의 극한기상으로 인한 산업재해 위험 확대, ④감염병 및 매개체 질병의 증가, ⑤농약사용의 증가와 화학물질 폭발 위험 등 화학물질 노출과 중독 위험 증가, ⑥노동자의 사회·심리적 안녕에 영향 등이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등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 방안을 잘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24 미국 NSC(National Safety Council)의 백서(데이터와 AI 활용)에 의하면 현재 스마트 안전보건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인 AI, IoT, 빅데이터 등과 결합하여 기존의 CCTV나 자동 감지와 같은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하는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측과 실시간 예방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즉, AI 영상분석으로 위험 행동을 감지하고, 웨어러블 기기로 생체신호와 환경을 모니터링하며, 빅데이터 분석으로 사고패턴을 예측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작업장 환경과 장비를 제어하고, 통합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실용화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러한 스마트 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고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재정적 문제로 스마트기술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적극 개발, 발굴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산업재해와 관련한 데이터를 비롯하여 노동자들의 일하는 환경이나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 등 다양한 데이터들을 취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료들 간의 연계와 정밀한 분석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AI를 활용하여 다양한 안전보건 정보 등을 분석하여 사고나 질병 발생 고위험 업종을 파악하거나 직업성 암 발생 위험을 예측하거나 재해원인을 심층분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R&D 예산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조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이아람·박정임(2025), “기후위기와 우리나라 노동자 건강권: 국제 프레임워크와의 정합성 검토”, 『한국산업보건학회지』 제35권 제3호, pp.211-226.



5.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방향

2025년 9월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사고사망만인율을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0.29‰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영세사업장과 취약노동자의 사고예방 지원에 집중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노력하며, 사고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였다. 안전과 보건의 일반화를 이루고 사고와 질병이 없는 일터를 조성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고사망자 등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사고사망자 발생이 많은 고령노동자, 외국인노동자, 노무제공자, 협력업체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과 이에 따른 적절한 국가 재정의 투입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산업재해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재정지원이 또한 요구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노동력 한명 한명이 매우 소중한 국가 자산이다. 산업재해를 경제개발과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은 우리 국민의 행복을 저해하고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산업현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일하는 문화가 잘 정착될 필요가 있다.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직업훈련 강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보 방안

황성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래인재연구본부장

초고령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적자원 활용과 개발에 대한 정책방안 고민 필요
DX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를 미치나 장기적으로는 특정 계층에 부정적 영향 초래 가능
AX는 역시 급속한 기술변화로 신입직 채용 등 고용시장에 큰 영향
청년층에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훈련과 지원 확대 필요

- 한국, 2050년 세계 65세 이상 인구 비중 가장 높은 국가로 전망
- 급격한 기술 발전이 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고용 유지가 필요
- AI가 초급 직무를 대신하여서 일경험을 가진 이들의 공백이 미래 노동시장에 충격을 줄 예정



**청년층 일경험
확대를 위한 방안**



초급 수준의 일경험을 대신하여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훈련

+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과정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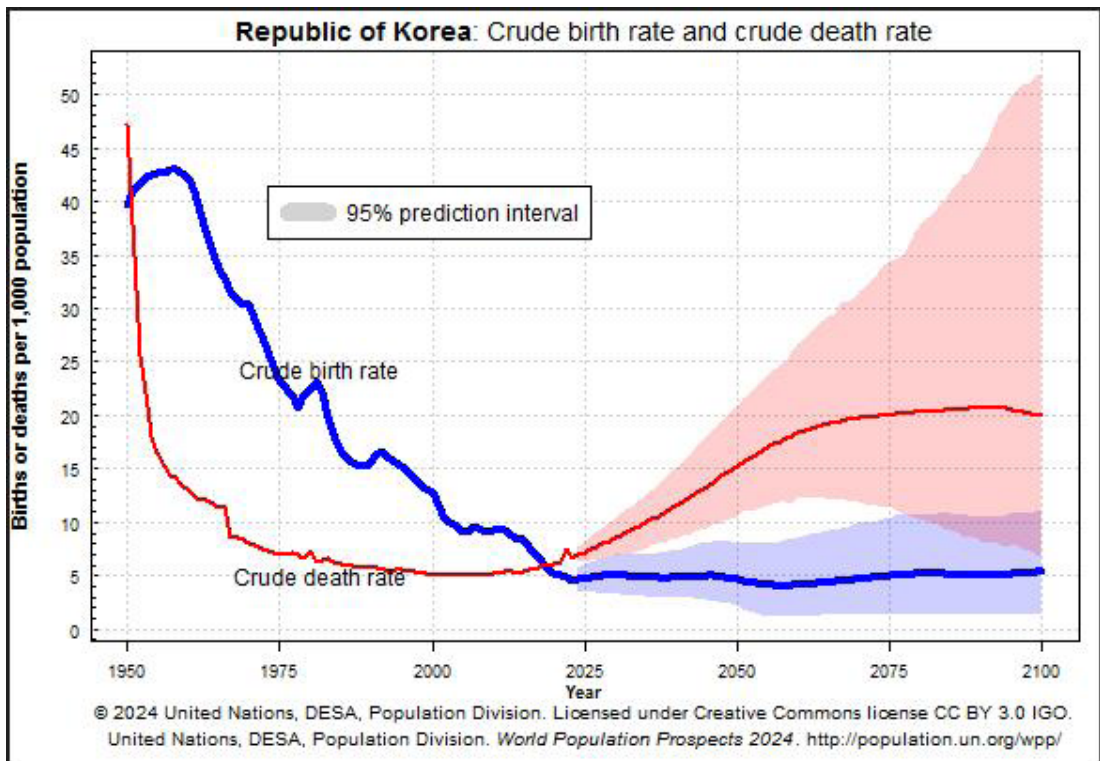
+

청년층에게 인턴십 경험
제공하도록 기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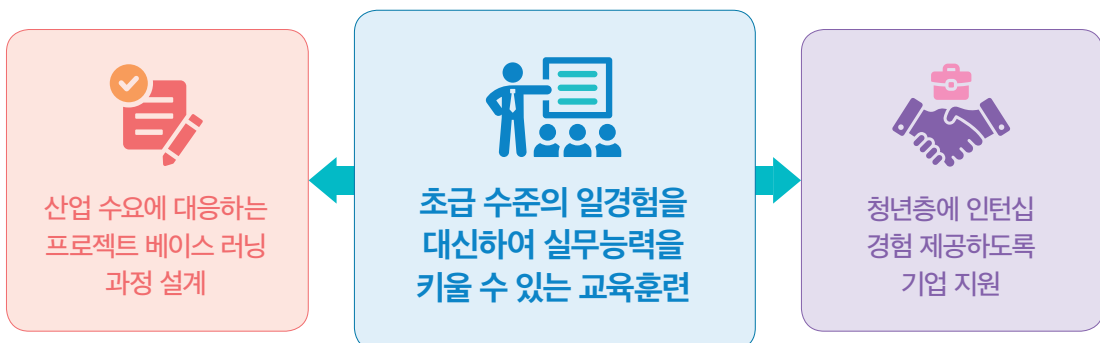
1.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커다란 요인은 저출생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 UN 인구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2050년에는 전 세계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한국으로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그림]에서 출생률과 사망률 추이를 통해 1980년대 이후 낮아진 사망률과 급격히 낮아지는 출생률이 우리나라 고령화를 견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출생률과 사망률 추이



자료: UN, <https://population.un.org/wpp/graphs?loc=410&type=Demographic%20Profiles&category=Line%20Charts>



세계의 인구구조 변화 방향과 속도가 현재 우리나라의 초고령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과 유사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인적자원 활용과 개발은 향후 여타 국가의 본보기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선진국 중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가와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분석하여 아이디어를 착안할 수는 있으나, 문제는 앞서 어떤 국가도 우리나라처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지 않았었다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족해지는 경제활동인구를 AI의 활용도 제고, 여성 및 중장년층,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이나 재외 동포 등 외국의 노동력 유입으로 대응하려면 각각의 대응 방안에 맞추어 제도를 보완하고 해당 인적자원 활용과 개발에 대한 정책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2. AI 시대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필자는 지난해 DX(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로 인한 고용효과를 밝히는 정량분석 연구와 AX(AI 전환, AI Transformation)로 인한 고용효과를 살펴보는 정성분석을 활용한 연구를 동시에 진행한 경험이 있다. 여기에 해당 연구의 간단한 소개와 함께 연구 결과로부터 도출된 함의를 전달하고 싶다. 먼저 정량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 세부 연구제목은 '산업용 로봇 도입이 고용 및 직무변화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이다. 여기서 DX의 대리변수로 산업용 로봇의 도입을 활용하였다. 이로부터 로봇 자동화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두 가지 경로로 분석하였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의 경로는 기업이 로봇화를 통해 계속 성장해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이는 성장효과로 부를 수 있다. 반대의 경로는 기업의 로봇화가 고용을 대체하여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이를 대체효과로 부른다.



실증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로봇을 도입한 기업군이 그렇지 못한 기업군보다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로봇 도입의 초기에는 고용증가를 유발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증가 효과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하나는 로봇 도입으로 대변되는 DX가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단기적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특정 계층(저숙련 노동자, 젊은 노동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두 번째는 산업혁명 이후로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해당 산업 또는 전 산업의 생산성 급등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생산성 함정(Productivity Puzzle 또는 Productivity Bandwagon effect)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즉, 기술변화로 해당 기업의 생산성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지만, 해당 기업에서 해고된 노동자가 기술변화로 생산성이 높아진 일자리 또는 기존과 비슷한 일자리로 이행하지 못하고 실업자로 남아있게 되면, 기술변화로 인한 해당 산업의 전체 생산성 급등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DX의 정량적 효과가 AX의 정량적 효과 측정을 대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추론을 제안한다. DX가 되었던 AX가 되었던 급격한 기술의 발전이 해당 산업 또는 전 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실업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고용의 유지가 첫 번째 조건이 아닐까 한다. 즉 다시 설명하면, DX 또는 AX로 인한 기술 발전으로 야기된 대체효과를 최소화하는 방법, 즉 일자리 나누기 또는 직무 전환을 통한 재고용 전략 등을 기업 차원에서 더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고민하면, 앞서 기술 발전이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가져와 양극화를 막아내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AX로 인한 고용효과를 살펴보는 연구(정성분석을 활용)를 두 산업에 한하여 FGI(핵심집단인터뷰) 형태로 진행하였다. 하나는 SW산업에서 AX가 현재 시점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파악한 결과, 해당 산업에서 AX로 기존 직원의 해고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신입직 채용의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최근 해외 글로벌 기업의 코딩 인력 감축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차세대 반도체 산업에서는 FGI 결과가 SW산업과 반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당 산업의 모든 정보가 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것이어서 AX로 대변되는 생성형 AI의 활용은 정보유출의 우려로 당분간 활용이 불가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조사 시점인 2024년 11~12월 현재, 차세대 반도체 산업에서 AI의 활용은 정중동(靜中動)의 상태로, AI 전문가와 도메인 전문가 간의 활용방안 연구가 진행되는 수준이다. 즉, 다시 설명하면 고용에는 아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성적 연구결과가 기술변화의 속도를 간과하여 이미 현실을 설명하는 데 크게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지난해 작성한 보고서가 여러 절차를 거쳐 인쇄물로 완성된 2025년 5월쯤에 AI의 급속한 기술변화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크게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시점에서 차세대 반도체 분야 역시 확인해 보지 않은 사이에 AI가 고용시장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Small LLM을 자체 컴퓨터 내에 내재하여 기업의 비밀을 외부로 유출할 위험 없이 AI를 활용함으로써 기존 직무 수행 노동자의 채용(주로 신입직의 채용)이 줄었음을 확인하였다.



3. 청년층 일경험 확대를 위한 교육 훈련의 필요성

AI 시대가 오기 전에, 직업훈련이 진정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항상 의문을 제기하곤 하였다. 현재도 고령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여주는 것 이외에 실제로 해당 훈련을 받으면 관련 업계에 취업이 될 확률은 얼마나 될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문의 배경은 산업의 수요에 철저하게 맞추어진 직업훈련이 아닌 경우가 직업훈련 시장에 너무 많다는 점이다. 다시 설명하면 직업훈련 시장에 만들어지는 다수의 과정이 손쉽게(이런 표현을 쓰는 게 그리 유쾌하지 않지만) 훈련생을 모집할 수 있고, 관련 강사진 섭외도 용이하여 해당 과정 개설을 통해 국가로부터 손쉽게 지원비를 획득하여 훈련기관의 존속에 도움이 되는 훈련과정이라는 점이다.

앞서 의문의 기저는 직업훈련이 실제로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개설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하여, 마지막에는 산업의 수요와는 철저히 동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심으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고령자, 여성 등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직업훈련이 실제 산업의 수요에 기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자 등 특정 대상에 대한 훈련은 다수의 도덕적 해이가 연결될 공산이 있음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훈련시장에 직업훈련이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것이 어쩌면 고용보험기금의 오용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앞서 직업훈련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청년층에게는 거둬들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로 미래에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AI 시대로의 급속한 진입으로 미래 청년세대들이 가질 수 있는 일경험의 기회와 의지가 더욱 축소될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수행한 여러 산업의 실태조사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앞에서 설명한 분석결과를 볼 때, 산업 내 수요에서 초급보다는 중급 이상의 경력직을 선호하며 더 나아가 초급직의 채용 선호에 기업이 매우 인색한 것을 발견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현시점에서 AI가 초급 정도의 직무를 대신하는 데 어려움이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시계를 좀 더 빨리 돌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미래를 생각해 보면, 산업의 니즈를 맞추어 줄 중급 이상의 인력에 대한 수요는 초급인력의 일경험이 사라진 상황에서 기대할 수 없는 수요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즉, 시장에는 이미 초급의 직무경험을 가진 중급 인력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자발적으로 동시에 비자발적으로 자제하며 부모에 의지하고 현실과 절연한 은둔 청년(히키코모리)이 될 공산이 커진다. 또한 앞서 설명하였듯이 일경험을 가진 이들의 공백은 미래 노동시장에 기이한 충격을 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일경험의 기회를 확대해 줄 수 있을지, 일경험을 대신할 실무능력 제고의 교육훈련 방법은 없을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다.

따라서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들이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과정을 계속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청년층들에게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과정에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앞서 미래에 일어날 기우에 가까운 고민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초급의 일경험을 가진 이들이 시장에 존재하지도 않게 되는 일이 없도록 산업별 위원회(ISC)와 고용노동부는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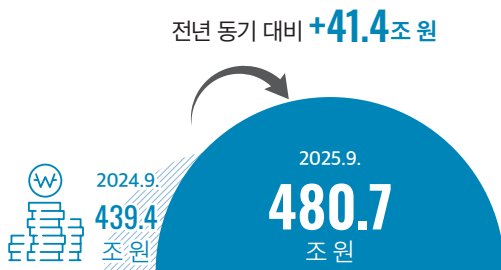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재정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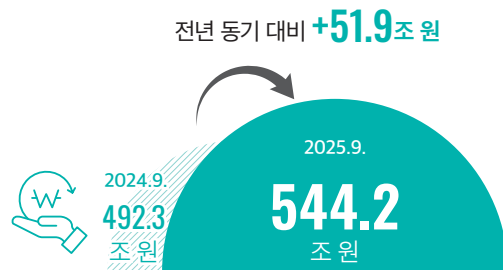
2025년 9월 기준

총수입·총지출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63.5조 원 적자



전년 동기 대비 **10.6조 원(적자 확대)**

관리재정수지

102.4조 원 적자



전년 동기 대비 **11.0조 원(적자 확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9.0조 원 흑자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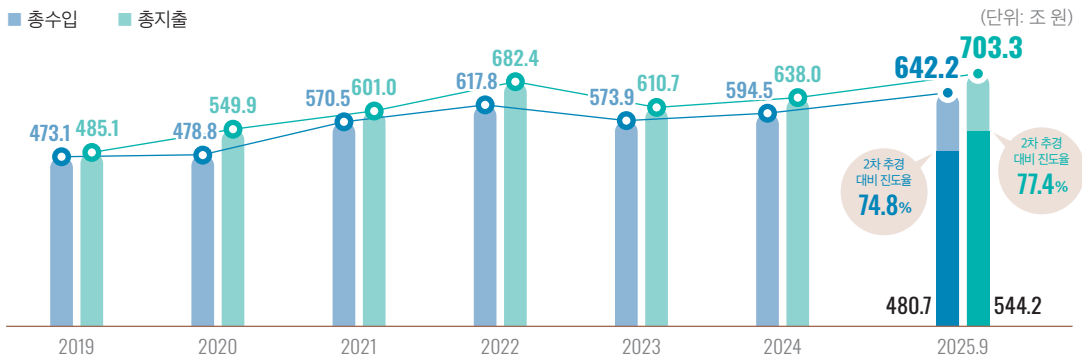
2)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3)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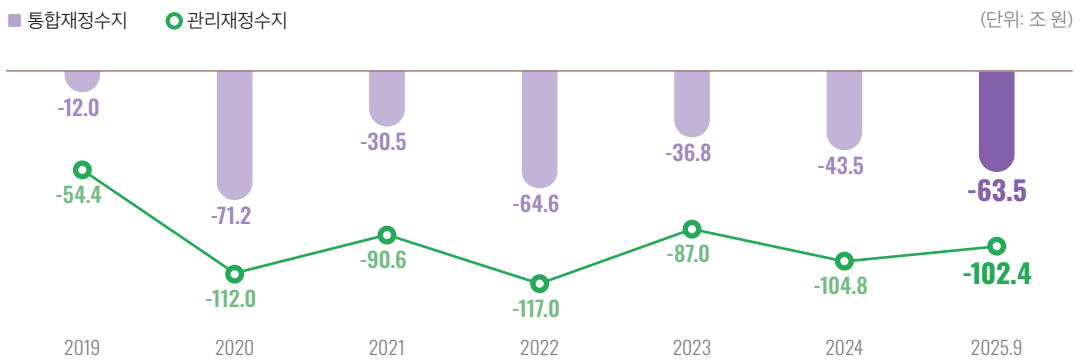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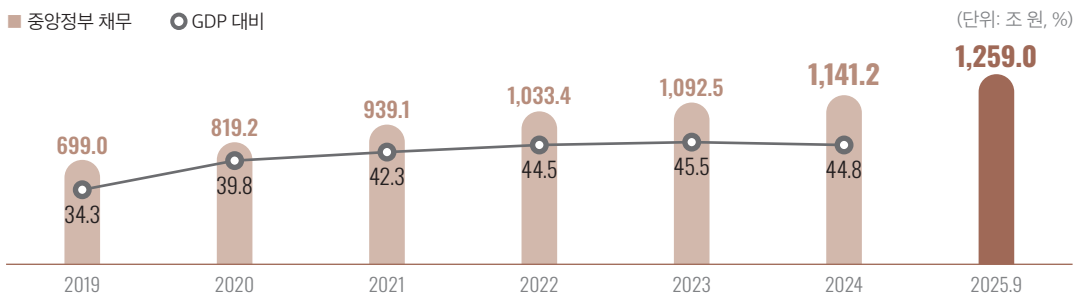




주: 2024년까지는 결산, 2025년은 2차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5.11.



주: 2024년까지는 결산, 2025년은 집행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5.11.



주: 1) 2024년까지는 결산, 2025년은 집행 기준
2) 중앙정부 채무 기준
3)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4)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한국은행 GDP 규모 확정 시 수정 반영 예정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5.11.



주요국 월간 재정통계

총수입

총지출

수지

...

...

...

미국 9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12개월 차)	규모	5조 2,346억 달러	7조 100억 달러	1조 7,754억 달러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6.4%	4.1%	-2.3%

독일 9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9개월 차)	규모	3,121억 유로	3,624억 유로	502억 유로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3.6%	8.6%	54.5%

일본 8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5개월 차)	규모	19조 6,388억 엔	47조 7,899억 엔	28조 1,511억 엔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8.2%	4.6%	15.8%

프랑스 9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9개월 차)	규모	2,643억 유로	3,853억 유로	1,211억 유로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5.0%	-0.5%	-10.6%

영국 9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6개월 차)	규모	5,770억 파운드	6,768억 파운드	998억 파운드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7.5%	8.3%	13.1%

**자료 : •미국)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Monthly Treasury Statement : September 2025(10.16. 발표)

•독일) Federal Ministry of Finance, Overview of federal budgetary and financial data up to and including September 2025(10.21. 발표)

•일본) 재무성, 국고 세입세출 상황(10.20.발표). 일반회계 기준이며 수지는 공식 발표치가 없어 세입-세출 잔액으로 자체 계산한 수치임. 일본의 일반회계 수입은 공채(국채)연간 발행 일정 및 이에 따른 수입변동으로 월별 변동이 큼

•프랑스) La situation du budget de l'État au 30 September 2025(11.4.발표)

•영국)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Public sector finances, UK: September 2025(10.21. 발표)

대한민국 9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9개월 차)	규모	480.7조 원	544.2조 원	63.5조 원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9.4%	10.5%	20.0%

해외재정동향

재정정보분석센터

주요국

1 | 미국

- 연준, 기준금리 25bp 인하(3.75~4.00%) 및 양적긴축(QT) 중단 결정
- APEC 한-미 정상회담 개최 및 관세 협상 타결
- 연방정부 섰다운 역대 최장 기록 경신

2 | 독일

- 연방 내각, 은퇴 이후 근로자 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활동연금' 법안 승인
- 통계청, 2025년 독일의 최대 교역국으로 중국이 재등극

3 | 일본

- 다카이치 신임 총리, 물가 대응을 위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 준비
- 일본은행, 단기 정책금리 0.5% 유지 결정, 6회 연속 동결

4 | 프랑스

- 르코르뇌 총리, 불신임 투표 통과 후 험난한 예산협상 직면
- 국제신용평가기관 Moody's, 프랑스 신용전망은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5 | 영국

- 재정연구소(IFS), 11월 예산안에서 소득세 인상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
- 예산책임청(OBR), 내년도 예산안을 앞두고 생산성 감소 예측

6 | 중국

- 2025년 3/4분기 경제성장률 4.8% 기록
- 중-미 정상회담 개최 및 관세전쟁 '일시적 휴전' 합의
- 한-중 정상회담 개최 및 통화스와프 연장

국제기구

1 | IMF

-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2025년 가을 전망)" 발표
- "세계 금융안정보고서(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발표

2 | OECD

- "2025 OECD 기업 지배구조 팩트북(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2025)" 발간
- "OECD 국가의 정부지출 결정 요인(Assessing government spending in OECD countries and searching for savings)" 워킹페이퍼 발간

주요국

미국

10.29. 연준, 기준금리 25bp 인하(3.75~4.00%) 및 양적긴축(QT) 중단 결정¹⁾²⁾

-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25bp 인하한 3.75%~4.00%로 결정*

* 소수 의견: Stephen Miran 이사는 50bp 인하 주장, Jeffrey Schmid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동결 주장

- 일부 문구 수정("경제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대") 및 하방 리스크 증가 강조

- 또한 12월 1일부로 양적긴축(QT)**을 중단하기로 결정

** 양적긴축(Quantitative Tightening, QT): 중앙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시 재투자하지 않아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 통화정책 (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의 반대개념)

- 미국채 만기도래분은 재발행되나, MBS*** 만기도래분은 단기국채(T-bill)로 재발행 예정

*** Mortgage-Backed Securities(MBS): 주택저당증권

- 향후 정책 경로 불확실성 시사

- 파월 의장은 경제 전망 및 리스크에 대한 참석자 간 견해 차이가 크고, 12월 금리인하는 미리 정해진 결론(forgone conclusion)이 아니라고 밝힘

10.29. APEC 한·미 정상회담 개최 및 관세 협상 타결³⁾⁴⁾

-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발표

- 7월 말 합의된 총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액 중, 2,000억 달러는 미국 정부 특수목적법인(SPV)에, 1,500억 달러는 MASGA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합의
- SPV 투자 조건으로 연 200억 달러 투자 상한액 및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사업으로 명시
- 상호 관세율 15% 유지 및 자동차·부품 관세율 15%로 인하 합의(기존 25%, 이르면 11월부터)

- 당초 '현금 선불'을 요구하던 미국이 한국 정부 요청*을 수용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한·미 간 이견이 적지 않았던 만큼 협상 양해각서(MOU)의 조속한 마련 및 공개가 필요

* 연간 투자 상한액 설정, 동등한 투자 이익 배분, 20년 내 원리금 미상환 시 배분 방식 재설정 등

- 한·미 무역 협상 최종 타결(11.14)

1)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51029a.htm>

2) <https://www.reuters.com/business/fed-in-fog-it-heads-toward-another-rate-cut-2025-10-29/>

3) <https://www.reuters.com/world/china/trump-heads-south-korea-face-trade-talks-north-korean-missiles-2025-10-28/>

4) <https://www.reuters.com/world/china/trump-says-trade-deal-reached-with-south-korea-2025-10-29/>

독일



11.5. 연방정부 셧다운 역대 최장 기록 경신⁵⁾⁶⁾

- 현지 시각 11월 5일부로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36일째에 접어들며 역대 최장 기록 경신

* 종전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정부 시절(2018.12~2019.1) 35일

- 이번 셧다운의 원인은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 여부로, 11월 4일 공화당이 발의한 14번째 임시예산안(CR)이 부결되며 최장 기록이 경신됨
- 의회예산국(CBO)은 셧다운이 일주일 더 지속될 시 약 110억 달러(16조 원)의 경제 손실을 예상
 - 현재 수십만 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무급 상태에서 근무하거나 강제 휴직 중이며, 항공 필수 인력의 결근·병가 등으로 인해 항공편 지연·결항 증가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확산 중
- 현지시각 11월 13일부로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공식 종료(역사상 최장기록, 43일)⁷⁾

10.15. 연방 내각, 은퇴 이후 근로 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활동연금' 법안 승인⁸⁾

- 정년(67세) 이후 근로를 지속하는 은퇴자에게 월 최대 2,000유로까지 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정부는 2030년까지 약 630만 명 감소가 예상되는 생산가능인구 공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
 - 제도 시행에 따른 세수 손실은 연간 약 8.9억 유로로 추산되며, 사회보험료 납부는 유지되어 재정에 기여하는 구조로 설계
- 제도 시행으로 숙련 인력이 노동시장에 머물러 노동력 부족과 연금 지출 증가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
 - 장기적으로는 고용 증가와 경제 성장을 통해 세수 손실이 상쇄될 것으로 기대
 - 고령층의 노동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노동력 부족과 경기 둔화에 대응하려는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평가
 - 반면, 조기퇴직 유인을 감소시키고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데에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5) <https://www.bbc.com/news/articles/cy40qndep8yo>

6) <https://www.cnn.com/2025/11/04/government-shutdown-trump-senate.html>

7) <https://www.reuters.com/legal/government/us-house-vote-deal-end-longest-government-shutdown-history-2025-11-12/>

8) [https://www.ft.com/content/b39dda3d-de8e-40d1-89f8-46bfad0b126e?](https://www.ft.com/content/b39dda3d-de8e-40d1-89f8-46bfad0b126e?https://www.ft.com/content/bea38d27-5807-4492-baeb-549bf0c0ce5c7)
<https://www.ft.com/content/bea38d27-5807-4492-baeb-549bf0c0ce5c7>

10.22. 통계청, 2025년 독일의 최대 교역국으로 중국이 재등극⁹⁾

- 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8월까지 중국과의 교역 규모는 1,634억 유로이며, 미국과의 교역 규모인 1,626억 유로를 추월
 - 2016~2023년까지 독일의 최대 교역국이었던 중국은 2023~2024년까지는 미국에 밀렸다가 2025년에 재역전
 - 중국에서의 수입은 8.3% 증가하고 수출은 13.5% 감소하여 무역 불균형 확대
- 메르츠 총리는 교역 구조상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상황에 대해 시장 다변화 필요성을 제기
 - 독일의 산업용 중간재 수입 수요가 높아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상승
 - 대미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은 관세와 무역정책으로, 자동차·기계·화학제품 등 독일 주력 수출 품목이 감소

일본

10.21. 다카이치 신임 총리, 물가 대응을 위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 준비¹⁰⁾

-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물가 상승 대응, 성장투자 촉진, 국방비 확충을 위한 약 13.9조 엔의 경제 대책 패키지를 마련하는 중
 - 해당 부양책은 10월 말 내각 승인 후 연내 추가경정예산 형태로 제출될 전망
 - 가계 보조금, 세제감면, 공공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 경기 부양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경로를 위한 중기적 조치로 설계하고 있으나, 추가 국채 발행 규모 증가와 금리 상승압력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동시에 존재
 - '아베노믹스'를 계승한 확장정책으로 평가되며, 향후 일본의 중기재정운용 전략과 일본은행의 금리정책 간 조정 필요성 부각
 - 재원은 국채 발행 확대와 예비비 활용을 병행하여 마련할 예정으로, 재정건전성 우려에도 성장 기반 확보가 우선이라고 판단한 결과

10.30. 일본은행, 단기 정책금리 0.5% 유지 결정, 6회 연속 동결¹¹⁾

-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9명 중 7명이 동결에 찬성하여, 무담보 콜금리 운용 목표를 0.5%로 유지
 - 우에다 총재는 금리 인상 노선을 유지하면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나 시기에 대해 미리 정해 둔 바가 없음을 표명

9)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overtakes-us-germanys-top-trading-partner-2025-10-22>10)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japans-new-pm-is-preparing-large-economic-stimulus-tackle-inflation-sources-say-2025-10-22>11) https://www.ft.com/content/13178e6f-4cb0-492d-b38c-f8bb39d3c3a9?hpid=ft_content-card

프랑스



-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과거 물가 상승 억제 의지를 밝히면서 중앙은행에 금리 인상에 비판적인 입장이었으며, 이번 금리 동결은 신임 총리 취임 9일 만에 발표한 결정
- 일본은행이 올해 안에 추가 금리 인상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주가는 상승,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하락
- 닷케이 지수는 장 중 한때 0.6% 급등하여 사상 최고치인 51,654포인트를 기록
-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3.12엔까지 떨어져 8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

10.17. 르코르뇌 총리, 불신임 투표 통과 후 험난한 예산협상 직면¹²⁾¹³⁾¹⁴⁾

-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와 국민연합(RN)이 제출한 두 차례의 불신임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르코르뇌 총리는 내각 불신임 위기에서 생존
- 한편, 불신임 투표 과정에서 르코르뇌 총리는 사회당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마크롱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였던 연금개혁의 중단을 제안
- 불신임 부결에도 불구하고, 르코르뇌 정부의 내각 불신임 위기는 여전히 팽배
- 연금개혁의 중단으로 불신임 투표에서 사회당의 지지를 확보하였으나, 그 대가로 사회당은 부자세(주크만세)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며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한편, 르코르뇌 총리와 프랑스 정부는 부자세 도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10.24. 국제신용평가기관 Moody's, 프랑스 신용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¹⁵⁾¹⁶⁾¹⁷⁾

- Moody's는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a3로 유지하면서도, 신용전망은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수정
- 이는 정치적 분열로 인해 프랑스의 재정건전성 회복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

12)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french-pm-faces-day-reckoning-likely-survive-no-confidence-votes-2025-10-16/>

13) <https://www.reuters.com/business/french-socialist-partys-faure-says-it-would-propose-zucman-wealth-tax-2025-10-15/>

14) https://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25/10/21/budget-2026-la-taxe-zucman-rejetee-d-ensemble-lors-de-l-examen-du-texte-en-commission-a-l-assemblee_6648209_823449.html

15) <https://www.reuters.com/business/moodys-revises-frances-outlook-negative-stable-political-instability-risks-2025-10-24/>

16)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sp-cuts-frances-rating-aa-1-heightened-risks-budgetary-consolidation-2025-10-17/>

17) https://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25/10/17/l-agence-s-p-abaisse-la-note-de-la-france-en-raison-de-l-incertitude-elevee-sur-les-finances-publiques_6647822_823448.html?search-type=classic&ise_click_rank=4

- 특히, 2028년까지 연금개혁을 중단하기로 한 프랑스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고 노동 공급을 줄여 프랑스 경제의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
- 또한, 국제신용평가기관 S&P는 정부 재정의 불확실성 및 정치적 불안정으로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AA- → A+)
- S&P는 2026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프랑스 정부의 재정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 평가
- 특히, 프랑스의 총부채가 2028년에는 국가 GDP의 121%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
- 한편, 국제신용평가기관 Fitch와 DBRS 역시 지난 9월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영국

10.16. 재정연구소(IFS), 11월 예산안에서 소득세 인상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¹⁸⁾¹⁹⁾

- 영국의 비정부기관 재정연구소(Institute of Fiscal Studies, IFS)는 세금 인상 또는 지출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29~2030년의 차입금 규모가 지난 3월 영국의 예산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OBR)이 예측한 규모(220억 파운드)보다 클 것으로 예측
- 이에 따라 영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세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음
- 실제로 10월 15일,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은 11월 예산안에서 추가적인 세금 인상 및 공공지출 감축의 의지를 표출
- 특히, 재정균형을 위하여 노동당 의원들에게 재정 지출에 대한 통제 강화를 강조

10.16. 예산책임청(OBR), 내년도 예산안을 앞두고 생산성 감소 예측²⁰⁾

- 영국의 예산책임청(OBR), 잠재 생산성 증가 전망치가 약 0.3%p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예상보다 큰 폭의 하향 조정으로 재정적자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측
- 한편, 생산성 하향 조정으로 노동당의 세금 관련 선거 공약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 상승
- 지난 3월 발표한 재정준칙에 대해 영국 정부는 99억 파운드의 여유자금만 남은 상황으로, 생산성 악화로 인해 소득세를 포함한 큰 폭의 세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짐

18) <https://www.ft.com/content/57afbb4a-93a6-4829-b135-86d62d97a69b>19) <https://www.ft.com/content/288f85d2-0c6c-47ac-9fc1-0aa9be538f3d>20) <https://www.ons.gov.uk/economy/grossdomesticproductgdp/bulletins/gdpfirstquarterlyestimateuk/latest>



10.21. 2025년 3/4 분기 경제성장을 4.8% 기록²¹⁾²²⁾

- 중국의 2025년 3/4 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8%를 기록
 - 전기 대비 성장률은 1.1%(25 1/4 분기: 1.2%, 2/4분기: 1.0%)를 기록, 3/4 분기 누계 성장률은 5.2%
 - 중국 정부는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 적극적인 경제 정책이 성장세를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
 - 1차 산업은 성장률 상승(3.8%→4.0%), 2차·3차 산업은 성장률 둔화(각각 4.8%→4.2%, 5.7%→5.4%)
-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경제 정책의 효과라고 평가하며, 향후 경제성장을 목표 달성(5% 내외), 제14차 5개년 계획 목표 완수 등을 위해 적극적인 거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10.30. 중·미 정상회담 개최 및 관세전쟁 ‘일시적 휴전’ 합의²³⁾²⁴⁾

-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10월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 개최
 - 6년 4개월 만의 정상회담으로, 양국은 통상 갈등 완화를 위해 1년 기한의 잠정 합의에 도달
 -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및 희토류·핵심 광물 수출제한 조치 1년 유예를 결정
 - 미국은 펜타닐 관세* 10%로 인하 및 수출통제 50% 적용(Affiliate Rule) 시행 1년간 중단을 결정
- * 펜타닐 관세: “중국 정부가 펜타닐 원료 물질 밀수출 대응에 미온적이다”라고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20% 추가 관세
- 또한 양국은 서로 부과 예정이던 항만 수수료를 잠정 연기 및 유예하기로 결정
- 이번 합의는 중국이 대두, 희토류 등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

21) <https://www.reuters.com/business/finance/view-china-q3-gdp-growth-slows-48-yy-line-with-forecast-2025-10-20/>

22) <https://www.cnn.com/2025/10/20/china-economic-growth-gdp-september-third-quarter-q3-retail-sales-industrial-output-urban-investment-fixed-income.html>

23)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key-issues-trump-xi-talks-south-korea-2025-10-30/>

24) <https://www.reuters.com/world/us/what-did-trump-xi-agree-tariffs-export-controls-fentanyl-2025-11-01/>

11.1. 한·중 정상회담 개최 및 통화스와프 연장²⁵⁾²⁶⁾

•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원-위안 통화스와프* 연장 및 확대에 합의

* 통화스와프(Currency Swap): 외환 유동성 위기 시 안정적인 외화 조달을 위한 거래로, 양 당사자가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에게 맡기고(담보 제공),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상대방의 통화(ex. 위안)를 빌려오는 방식

- 지난달 만료된 70조 원(4천억 위안) 규모의 5년 만기 통화스와프를 갱신한 것으로, 캐나다(무제한 통화스와프 합의)를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

** 한·중 통화스왑 규모: '09년(1,800억 위안) → '11년(3,600억 위안) → '20년(4,000억 위안)

• 양국은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

- ①공동 혁신·창업 프로그램, ②장기('26~'30년) 경제 협력, ③서비스 무역 교류, ④보이스 피싱 및 온라인 범죄 대응, ⑤실버경제 협력, ⑥한국산 감 생과실의 검역

• 한·중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MOU 특성상 구체성과 영향력이 부족함에 따라 후속 협상 및 협력 실행 여부 등이 향후 과제

국제기구

IMF

10.14.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2025년 가을 전망)” 발표²⁷⁾•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2025년 3.2%, 2026년 3.1%로 지난 7월 전망²⁸⁾ 대비 올해는 0.2%p 상향 조정하고, 내년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일부 완화, 달러 약세, 글로벌 물가상승률 안정은 긍정 요인에 해당하나, 무역 불확실성, 이민 제한에 따른 생산성 악화 등은 세계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

• 한국의 경우 2025년 경제성장률은 0.9%로 지난 7월 전망(0.8%) 대비 0.1%p 상향 조정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은 1.8%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25)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china-south-korea-sign-fx-swap-other-economic-agreements-seoul-says-2025-11-01/>

26) <https://www.reuters.com/world/china/issues-stake-summit-between-chinas-xi-south-koreas-lee-2025-10-31/>

27) IMF, *World Economic Outlook: Global Economy in Flux, Prospects Remain Dim*, 2025. 10. 14.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5/10/14/world-economic-outlook-october-2025>)

28) IMF 세계경제전망(WEO)은 통상적으로 4월·10월에 주 전망, 1월·7월에 수정 전망 형태로 발표

주요국의 IMF 경제성장률 전망(2025년 10월) 추이

(단위: %, %p)

국가명	2024	2025				2026			
		4월	7월 (A)	10월 (B)	조정폭 (B-A)	4월	7월 (A)	10월 (B)	조정폭 (B-A)
세계	3.3	2.8	3.0	3.2	0.2	3.0	3.1	3.1	-
선진국	1.8	1.4	1.5	1.6	0.1	1.5	1.6	1.6	-
미국	2.8	1.8	1.9	2.0	0.1	1.7	2.0	2.1	0.1
독일	△0.2	0.0	0.1	0.2	0.1	0.9	0.9	0.9	-
프랑스	1.1	0.6	0.6	0.7	0.1	1.0	1.0	0.9	△0.1
영국	1.1	1.1	1.2	1.3	0.1	1.4	1.4	1.3	△0.1
일본	0.2	0.6	0.7	1.1	0.4	0.6	0.5	0.6	0.1
한국	2.0	1.0	0.8	0.9	0.1	1.4	1.8	1.8	-
신흥개도국	4.3	3.7	4.1	4.2	0.1	3.9	4.0	4.0	-
중국	5.0	4.0	4.8	4.8	-	4.0	4.2	4.2	-

자료: IMF 홈페이지

10.14. “세계 금융안정보고서(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발표²⁹⁾

- 2025년 글로벌 금융시장은 무역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비해 안정적이지만 현재 진행되는 금융시장의 변화는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으로 평가
 - 과대평가된 자산가치, 정부·민간 부문의 부채수준 증가, 금융기관 레버리지 확대 등 완화적 금융정책에 따른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으로 누적
 -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적절히 연계되지 못하고 그 괴리가 확대되면서 금융 안정성의 위협 요인으로 부상할 우려 제기
 -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비은행 금융기관(NBFI)의 영향력이 확대되며 금융 시스템 리스크의 새로운 진원지가 될 우려
-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조정은 금융안정성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며, 비은행 금융기관(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자산 확대에 따른 감독 권고

29)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Shifting Ground beneath the Calm*, 2025. 10. 14. (<https://www.imf.org/en/Publications/GFSR/Issues/2025/10/14/global-financial-stability-report-october-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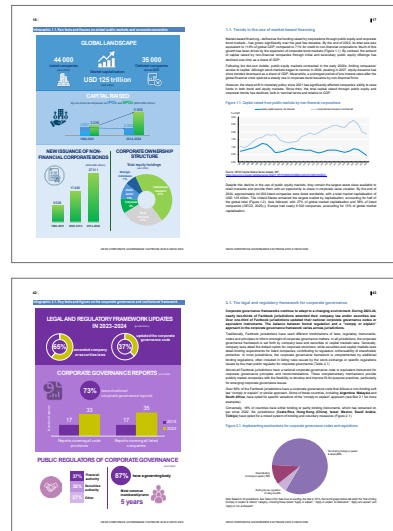
OECD



10.6.

“2025 OECD 기업 지배구조 팩트북(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2025)” 발간³⁰⁾

- 2025년 기업 지배구조 팩트북은 52개 경제국(OECD, G20 및 금융안정위원회 관할권³¹⁾ 등) 대상으로 기업 지배구조 체계의 차이 및 특징을 분석
 - 2024년 말 기준, 전 세계 상장기업 수는 약 44,000개이며 시가총액은 125조 미국 달러 수준, 기업 소유구조에서 기관 투자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기관투자자 보유 지분은 47% 수준
 - 52개 관할 구역의 1/3 이상에서 연기금이 기업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보유
 - 기업 이사회에서 여성 의석 비율은 평균 29% 수준이지만 고위 경영진 참여는 미미한 수준
 - 2022년 이후 원격 주주총회 개최가 보편화되고 있으나 회의 관련 디지털 보안위험 및 장애 발생시 주주에 대한 명시적인 보호 대책은 부족한 실정
- 기업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개가 요구되는 관할권 비율은 90%까지 증가하는 추세, 기업지배구조 및 규제 관련 프레임워크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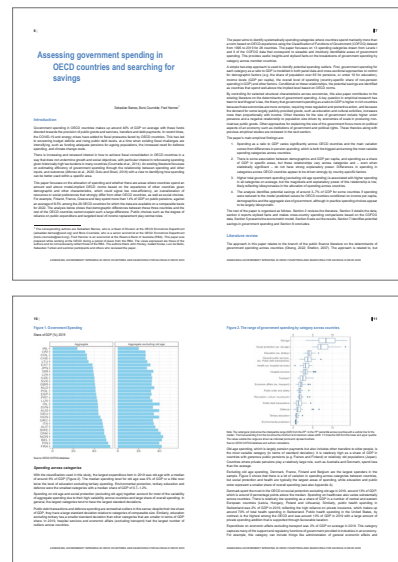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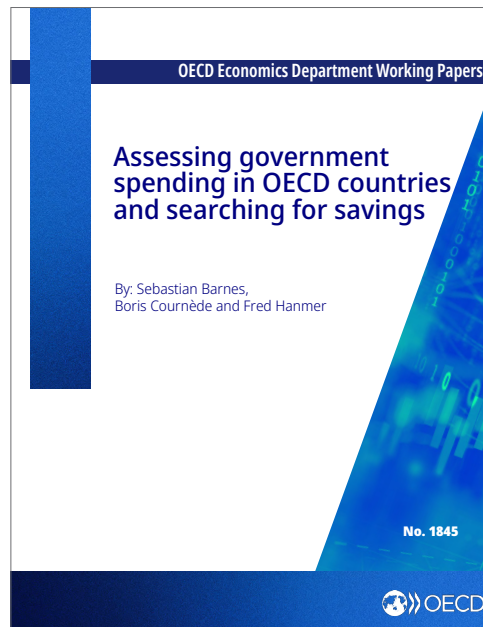


30) OECD(2025),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f4f43735-en>. OECD 기업지배구조 팩트북은 2년 주기로 발간되며 국가별 보고서가 별도로 발간됨(한국편은 2025년 10월 30일 발간)

31)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10.29. “OECD 국가의 정부지출 결정 요인(Assessing government spending in OECD countries and searching for savings)” 워킹페이퍼 발간³²⁾

- OECD 국가의 정부지출 구성과 결정 요인 탐구를 위해 정부기능분류(COFOG)를 사용하여 1995년부터 2019년까지 OECD 28개국을 대상으로 13개 주요 정부지출 항목을 비교·분석
 - OECD 국가 간 지출 비교(GDP 대비 총 정부 지출), 정부기능분류(COFOG)를 이용한 사회보장 및 보건, 교육, 국방 등 세부 정부지출 비교, 정부지출의 효율성 및 효과성 평가, 예산 관련 거버넌스 비교로 구성
- 인구 고령화와 사회보장, 기후 및 방위 비용 증가로 재정적 압박과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OECD 전체에서 정부 지출과 적자가 크게 증가
 - OECD 국가의 정부지출은 평균 GDP의 약 40%에 해당하며, 전체 정부지출 중 가장 큰 지출 범주는 사회보장 및 보건 분야
- 국가별 정부지출 차이의 원인을 소득 및 인구통계, 정부지출에 대한 국민 선호도와 같은 요인으로 분석하였으나, 표본(28개국) 및 국가별 지출의 이질성으로 인해 설명력은 제한적
 - 다만 OECD 내에서 상대적으로 지출 수준이 높은 일부 국가의 경우 공공서비스 효율성 개선,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GDP의 3~7%에 달하는 재정여력 확보 가능성을 확인



32) Barnes, S., B. Cournède and F. Hanmer(2025), “Assessing government spending in OECD countries and searching for saving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1845,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0697f1d7-en>.

11

2025
November

Fiscal Calendar



재정

2025년 11월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발표(기획재정부, 10.31.)

- 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연간 발행계획 및 현황을 고려하여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을 발행할 예정
- 표면금리는 10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735%, 10년물 2.885%, 20년물 2.945%)를 적용
- 가산금리는 5년물 0.295%, 10년물 0.5%, 20년물 0.555%를 추가할 예정



경제

2025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한국은행, 10.28.)

- 2025년 3/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2% 성장(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
- 민간소비는 재화(승용차, 통신기기 등)와 서비스(음식점, 의료 등) 소비가 모두 늘어 1.3% 증가
- 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1.2% 증가
-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0.1% 감소
- 설비투자는 기계류(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를 중심으로 2.4% 증가
-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를 중심으로 1.5% 증가, 수입은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1.3% 증가

2025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국가데이터처, 11.4.)

-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2.4% 각각 상승
- 전년 동월 대비 서비스, 공업제품, 농축수산물 및 전기·가스·수도가 모두 상승하며 전체 2.4%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8% 하락

재정

- 2026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2024년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

경제

-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통계청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 한국은행 2024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속보) 발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발표
- 국제통화기금(IMF) 수정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1월**재정**

- 2024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 2024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2월**재정**

- 2026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3월**재정**

- 2024년 결산 감사 의결 (기획재정부 → 감사원)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발표
-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4월**재정**

- 2025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 2026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2024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 → 국회)
- 2024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 2024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경제

- 통계청 2025년 1/4분기지역경제동향 발표
- 통계청 2025년 1/4분기가계동향조사 결과발표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 (Economic Outlook) 발표

5월**경제**

- 한국은행 2025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 통계청 2025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6월**재정**

-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경제

- 202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한국은행 2025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 통계청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수정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7월**재정**

- 2026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경제

- 통계청 2025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경제전망 발표

8월**재정**

- 2026년 예산안 제출(정부 → 국회)
-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9월**경제**

- 한국은행 2025년 3/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속보)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발표
-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10월**경제**

- 통계청 2025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 발표

11월**재정**

- 2026년 예산 확정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12월



사직단 전경

하늘 제사의 벼에서 유래한 관청, 사도시

조선은 나라의 근간이자 재정의 근본인 농업을 귀중히 여겼다. 때문에 미곡을 관장하는 관청인 사도시(司導寺)의 이름을 뜻하는 한자에는 벼를 뜻하는 한자가 들어간다. 사계절의 흐름과 하늘을 살펴 농사가 잘되도록 돌보는 것이야 말로 백성을 살리고 나아가 나라를 보전할 수 있는 중요한 일임을 확실히 한 것이다.

글·조경철 연세대학교 사학과 객원 교수, 나라이름역사연구소 소장, 한국사상사학회 회장



서울 선농단 전경



사직단 제사

01 사직단과 서울 선농단

사직단은 토지의 신과 곡신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곳으로 태조 이성계가 한양에 수도를 정하고 궁궐과 종묘를 지을 때 함께 만들었다. 서울 선농단은 조선시대 춘분과 추분에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한 선농제와 기우제를 지내던 곳으로 신농(神農)씨와 후직(后稷)씨에게 제사를 지냈다. 두 곳 모두 조선시대에 왕들이 농사를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들이다.

서울 여러 곳에서 지금은 사라진 조선시대 관청들의 건물이 있었던 표시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안국역에서 창덕궁의 돈화문으로 가는 길에 있는 ‘사도시’란 표시석이다. 이름만 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관서인지 알기 어렵다. 한자를 알아야 풀이가 가능하다. 우선 ‘사도시(司隲寺)’의 사(司)는 맡는다는 뜻이다. 지금의 사법부(司法府)가 법을 맡는 국가기관을 말하는 것과 같다. 시(寺)는 보통 절 사(寺)로 쓰이지만 관청으로 쓰일 때는 시(寺)로 읽는다. 원래 처음 중국에서 인도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인 관서가 홍려시(鴻臚寺)였다. 그래서 나중에 절 이름에 ‘白馬寺’처럼寺가 붙게 되었고 읽을 때는 백마시가 아닌

백마사가 된 것이다. ‘사도시’의 ‘사’와 ‘시’는 그래도 좀 알려진 한자지만 ‘隲(도)’는 매우 희귀한 한자다. 아마 처음 보는 분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도’가 벼와 관련 있는 한자란 건 알 수 있다. ‘도’는 道(길 도)+禾(벼 화)로 구성되어 있다. 道는 음을 나타내고 禾는 뜻을 나타낸다. 결국 ‘사도시’는 이름대로 풀면 ‘벼[쌀]을 담당하는 관서’란 뜻이다.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호전(戶典)’에 속한 관사(官司)로 ‘사도시’ 등이 나온다. 또한 사도시의 책임자인 제조(提調)가 정3품에 해당되어 ‘정3품 아문’에 속하며 맡은 일에 대해서는 ‘이전(吏典)’에서 서술하고 있다.



02 경국대전(經國大典) 1~2권

이전(吏典)과 호전(戶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호전(戶典)에는 '사도시' 등이 나오고 이전(吏典)에는 사도시의 책임자인 제조(提調)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호전에 소속된 관사는 내자시, 내섬시, 사도시 등이 있다”
“어름(御廩, 왕실 창고)의 미곡과 궁궐 내에 공급하는 장(醬) 등의 물품을 맡는다”

벼를 나타내는 한자어는 여러 가지다. 가장 일반적인 한자어는 벼 화(禾), 벼 도(稻), 쌀 미(米)다. 벼를 포함한 일반적인 곡식은 ‘화’, 특별히 쌀 벼를 의미할 때는 ‘도’, 우리가 먹는 쌀은 ‘미’를 쓴다. 그럼 ‘사도시’의 ‘도’는 어떤 벼를 말하는 것일까. 중국 사마천이 쓴 『사기』의 「사마상여열전」에 이런 말이 나온다.

“槩一莖六穗於庖(도일경육수어포)”
“부엌에서 일경육수를 골라내다.”

일경육수(一莖六穗)는 한 줄기에 이삭이 여섯 개 달린 벼를 말한다. 여러 수확한 벼들 가운데 ‘일경육수’는 하늘에 제사 드리는 벼다. ‘일경육수’를 골라내는 작업이 ‘도(槩)’고 그렇게 해서 얻은 벼를 ‘도(槩)’라고 한다. 곧 ‘일경육수’의 다른 말이 ‘도(槩)’가 되는 것이다. ‘일경육수’로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한 해의 풍작을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다.

일경육수(一莖六穗)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긴 벼인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줄기 하나에 6개가 달린 이미지를 떠올리다 보면 백제 칠지도가 생각난다. 칠지도는 백제 근초고왕(또는 전지왕)이 일본에 하사한 칼이다. 칠지도에 가지가 몇 개냐고 물어보면 ‘칠지’이므로 당연히 7개라고 대답하다가 막상 세보라고 하면 쉽지가 않다. 6개까지 세다가 잠시 망설인다. 어떤 이는 칠지도의 가지가 6개라고 하고 어떤 이는 7개라고 한다.

일본 석상신궁(石山神宮, 이소노카미 신궁)에서 18세기 이 칼이 소개될 때는 6개 달린 창이나 칼이라고 소개되었다. 그러다 칼의 양날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기에 ‘칠지도’라고 쓰여 있어 칠지도란 확정적인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런데 왜 백제인들은 가지가 6개인 듯 7개인 듯 모호하게 만들고서 칠지도란 이름을 붙였는지는 알 수 없다. 필자는 칠지도의 모양이 ‘일경육수’라는 점에 착안하여 칠은 하나의 줄기와 여섯 개의 가지의 합이라고 생각한다. 곧 $7=1+6$ 이다. 칠지도는 실전용 칼이 아니다. 하늘에 제사를 드리거나 중요한 의식에 사용하는 칼이라고 생각한다. 그 모양을 하늘에 제사 지내는 상서로운 벼의 일종인 ‘일경육수’처럼 만들어서 칠지도의 의례적 성격을 더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서로운 벼에는 일경육수(一莖六穗) 외에

일경구수(一莖九穗)도 있다. 이러한 상서로운 벼를 총칭하여 ‘가화(嘉禾)’라고 한다. 『삼국사기』 등 옛 기록에 백성들이 ‘가화’를 바쳤다는 기록이 종종 보인다. ‘가화’는 풍요와 태평성대를 상징했다. ‘풍요’를 엮두에 둔다면 하늘에 제사 드리는 벼로 일경육수(一莖六穗)의 ‘육수’보다 일경구수의 ‘구수’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왜 ‘일경육수(一莖六穗)’가 그 자리를 차지했을까? 농사짓는 데 빠져서는 안되는 것이 달력이다. 농사는 날짜와 철에 따라 재배하는 작물이기 때문이다. 쌀을 ‘미(米)’라고 하고 88세를 ‘미수(米壽)’라고 한다. 쌀 미(米)를 파자(破字)하면 $八+十+八$ 곧 88이 된다. 벼가 쌀이 되기 위해서는 88번의 단계는 아니지만 그만큼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러 단계의 시기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달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백제가 일본에 하사한 칠지도를 보관하고 있는 일본 나라현의 석상신궁



백제의 칠지도(석상신궁 보관)

03 칠지도와 석상신궁(石山神宮)

백제가 일본에 하사한 칠지도가 일본 나라현에 있는 석상신궁에 보관되어 있다.

옛날 왕들은 하늘이 정해준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왕들은 어떻게 자신이 하늘의 자식이라는 것을 증명했을까. 바로 달력이었다. 하루하루, 한달 한달, 365일 12달은 천체의 운행을 살펴 과학적인 방법으로 알아냈다. 몇 날 며칠에 ‘일식’과 ‘월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백성들은 왕이 하늘이 정해준 인물이라 생각했다. 따라서 달력은 농사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면서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상징과 같은 것이었다.

옛사람들은 하늘에서 궁궐에 달력을 상징하는 풀이나 나무를 자라나게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상상 속의 식물이지만 요순 때 궁궐에 실제로 피어났다고 한다. 그것이 명협(莢莢)이다. 명협은 풀로 보기도 하고 ‘명지(莢枝)’라고 하여 나무로

보기도 한다. 명협이 달력을 나타낸다고 하여 역초(曆草)라 부르기도 한다. 달력을 상징하는 명협의 출현은 바로 태평성대를 상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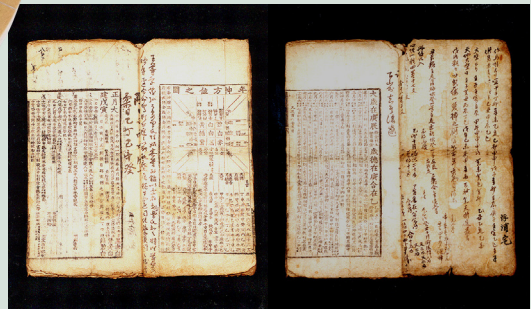
명협은 상상 속의 식물이지만 옛 그림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산둥성 무씨사당(武氏祠堂)의 화상석(畫像石)에 전형적인 모습이 남아있다. 6개의 잎이 달린 육협과 15개의 잎이 달린 15협의 명협이다. 15협은 한달을 상징하고 6협은 1년을 상징한다. 15협은 하루에 하나씩 피고 16일째는 하나씩 진다. 6협은 한 달에 하나씩 피고 7개월째는 한 달에 하나씩 진다. 무씨사당 화상석에 그려져 있는 두 명협은 6협의 6개가 모두 피었고 15협의 15협이 모두 피었으므로 6월 15일이 된다.



양부일구(仰釜日晷)



휴대용 양부일구(仰釜日晷)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달력, 경진년대통력(庚辰年大統曆)

04 양부일구(仰釜日晷)와 경진년대통력(庚辰年大統曆)

조선 세종 때의 해시계인 양부일구는 ‘하늘을 떠받드는 가마솥’과 같이 오목한 모양의 해시계로 대부분의 해시계는 평면이지만 양부일구는 반구형이다. 경진년대통력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조선시대 달력이다. 해시계와 달력은 모두 천문관측을 상징하는 것으로, 천문관측은 하늘의 명을 받은 왕이 주관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필자는 일경육수(一莖六穗)가 바로 6협(六協)의 명협(明協)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한다. 그림의 6협은 잎이 6개이지만 가운데 줄기를 세우면 일경육수(一莖六穗)의 모양이 된다. 일(1)경육(6)수가 일(1)경구(9)수보다 더 선호되었던 이유는 6수가 6협처럼 달력을 의미했기 때문이 아닐까. 결국 일경육수(一莖六穗)가 상서로운 벼의 대표가 된 것은 벼와 떼어 수 없는 관계인 달력을 상징하는 명협(6협)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왕실의 미곡과 장을 관장하는 관서의 이름에 도란 글자가 들어간 '사도시'가 된 것은 일경육수란 벼와 명협(6협)이란 달력의 의미가 함께 들어간 것이다. 전근대 사회에서 농업은 재정의 기본이었고 나라를 유지하는 근간이었고 백성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좌묘우사'란 말은 곧 궁궐의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을 둔다는 말로 사직은 곡식 신과 토지 신을 말한다. 나라를 보전한다는 말을 '종사'를 보전한다고 말하는데 곧 농업이 나라를 보전하는 요체임을 말하고 있다.

나라의 요체인 농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벼다. 벼가 잘되고 농업이 잘되고 나라 재정이 안정되고 나라가 발전되는 요체는 '도(藥)'란 풍요를 상징하는 벼에 있다. 이 '도'가 달력을 상징하는 '6협'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던져준다.

나라의 안정과 재정의 안정은 내일을 내다보는 치밀한 계획도 필요하지만 '도=일경육수'의 모체가 되는 명협처럼 하루하루가 모여 한달이 되고 한달 한달이 모여 12달이 되듯이 그 출발은 언제나 오늘 하루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나라 재정을 살핀다면 언제나 '도'가 넘치는 풍요로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



중국산둥성 무씨사당(武氏祠堂) 화상석(畫像石) 탁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명협

05 무씨사당(武氏祠堂) 화상석(畫像石) 탁본의 명협(明協)

중국 산둥성 무씨사당의 화상석에서 상상 속의 식물인 명협 즉, 역초를 발견할 수 있다.



예산의 핵심은 예산항목에 있다. 이 때문에 영미식 예산제도에서는 예산을 나타내는 ‘budget’과 예산항목을 의미하는 ‘appropriation’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budget’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통계 형식의 요약표를 나타내고, 실질적인 법적 규율은 ‘appropriation’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appropriation’은 특정한 용도에 할당된 일정 금액의 지출을 승인한다는 의미도 있다.¹⁾ 이러한 ‘지출 승인’은 규정된 목적과 용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집행자에게 일정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예산권한(budget authority)이라 하는데, 예산권한은 제공되는 예산자원의 유형, 예산자원의 사용기간, 그 사용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 예산권한의 유형들

우선 예산권한으로 제공되는 예산자원의 유형은 현금, 채무,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²⁾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현금인데, 예산권한이 현금으로 주어지면 집행자는 그 금액을 회계연도 내에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만약 현금 지출이 연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당해 예산권한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물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출하지 못한 현금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거나 다른 예산항목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두 번째 유형인 채무(또는 지출의무, obligation)에서는, 정부가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의회가 ‘부담가능한 채무’의 형태로 제공한다.

1) 이 때문에 ‘appropriation’은 문맥에 따라 ‘예산항목’뿐만 아니라 ‘지출승인’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

2) OECD(2001), *Managing Public Expenditure: A Reference Book for Transition Countries*, pp.45~47 참조



예산항목과 예산권한: 예산의 전액 편성

11월호 예산항목과 예산권한에 대한 이야기는
12월호 미국, 일본사례 연재로 이어집니다. (편집자 주)

글·옥동석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예산의 편성과 승인 당시에는 회계연도 내에서의 현금지출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지만 지출의무와 채무를 지는 것이 필요할 때 이러한 채무기준의 예산항목이 편성된다. 한국에서는 ‘국고채무부담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주로 재해복구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의 자원(resource)은 발생주의 회계 기준을 예산으로 확대하여 경제적 기회비용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 지출이 없더라도 경제적 자원이 소모되면 그 자원의 소모는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는 현금 지출이 없지만 경제적 자원의 소모이기에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만약 감가상각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면 예산의 집행자는 그 금액만큼을

보전하여 자산의 가치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기부채납과 같이 정부가 무상으로 자산을 보유하게 될 때는 그 가액이 발생주의 기준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³⁾

예산권한은 편성된 예산자원의 사용기간에 따라서도 구분될 수 있다. 사용기간이 회계연도 1년에 한정되는 단년도 예산과 수 개의 연도에서 집행가능한 다년도 예산이 있다. 그리고 그 사용기한을 명시하지 않는 무기한(無期限) 예산, 영구적으로 집행가능한 영구적(永久的) 예산도 존재한다. 무기한 예산은 일정 금액을 명시하면서 그 금액을 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정 과업의 수행을 위해 그 집행자에게 수년간의 재량을 부여하는 극히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3) 발생주의 개념의 자원예산은 예산사업의 원가를 공정하게 비교하는 장점이 있는데, 뉴질랜드, 영국 등 극히 일부의 국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중심으로 발생주의 예산을 도입하고 있다.

영구적 예산은 그 기간뿐만 아니라 금액도 일반적으로 명시되지 않는데, 매년의 예산편성에서 재량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복지급여(entitlements) 등 의무적 지출에서 주로 나타난다.

예산의 사용방법도 예산권한의 내용이 된다. 예산사업의 상세한 목적과 용도뿐만 아니라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과 제약, 권한과 책임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다. 이들은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규정될 수도 있지만, 매년 예산에서 각각의 예산항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도 규정될 수 있다. 후자의 형태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의회는 매년 개별 예산항목들의

상세한 내용을 ‘appropriation acts’라는 방대한 법률로 채택하고 있다.⁴⁾

그러나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미국과 달리 예산항목의 목적과 용도를 의회가 개략적으로 -미션 등의 형태로- 규정할 뿐 그 세부적인 사용방법은 행정부에 위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예산에서는 예산항목에 대한 내용이 미국처럼 복잡하지 않고 매우 간단하게 기술된다. 한국의 예산 역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는데, 국회는 예산항목의 사용방법을 서술적인 ‘부대의견’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결하기도 한다.



4) ‘appropriation acts’는 ‘지출승인법’으로 번역되는데, 미국에서는 12개의 법률로 구분되며 그 분량은 수천 페이지에 달한다. 미국 ‘지출승인법’의 내용은 옥동석(2017), “예산법률주의와 재정사업의 책임성,” 『예산정책연구』 제6권 제1호, 국회예산정책처, pp.1~39 참조



| 사업비의 전액편성

예산항목에 부여되는 예산권한의 내용은 이처럼 매우 다양하지만, 예산권한 부여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핵심 원칙은 해당 사업이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이 부족하여 건물이 짓다 마는 형태로 방치되거나, 교과과정의 일부만 수행되어 교육의 온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예산 전체는 낭비일 수밖에 없다. 완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업에 대해 파편적인(piecemeal) 예산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사업비의 '전액편성(full funding)' 정책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전액편성의 원칙은 다년도 사업에서 특히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에서는 예산편성이 매년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년주의 원칙'이 준수되는데, 이는 다음 연도 이후에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의회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만약 지금의 의회가 향후 수년 간의 사업비를

한꺼번에 승인한다면 다음 연도 이후의 의회는 예산 결정 권한을 제한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예산의 전액 편성 원칙에 따라 다년도 예산권한이 편성되면 불가피하게 '단년주의 원칙'이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헌법은 예산권한을 원칙적으로 단년도에 한정하지만 예외적으로 '계속비'라는 항목을 인정하여 다년도 사업을 보호하고 있다. 헌법 제54조는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5조는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들은 모두 '단년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에서는 계속비의 연한을 5년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를 허용하면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I 장기계속공사에 대하여

그런데 근래에 들어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의 개수와 금액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도로와 철도사업에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의 개수(금액)는 2012년에 191건(3조 6,267억 원)에서 2021년에 3건(1,048억 원)으로 급감하였다.⁵⁾ 많은 사업이 수 개년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다년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업비가 매년 단년도 예산권한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수년에 걸쳐 집행되는 총사업비가 사업 집행자에게 한꺼번에 제공되지 않고 매년 파편적으로 분산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한국에서는 ‘장기계속공사’라고 부른다.

‘장기계속공사’ 하에서 사업 집행자는 계약서에 총공사 금액을 부기하고 매년 제공된 예산(즉, 단년도 예산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1차 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 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또다시 체결되는데, 이 금액은 예산당국이 사업 집행자에게 제공하는 매년 예산 금액으로 한정될 것이다. 이처럼 ‘장기계속공사’에서는 총공사 금액이 계약서에 기재되기는 하지만, 매년 제공되는 예산금액에 따라 새롭게 계약이 체결되며 공사가 수행된다. 이 때문에 ‘장기계속공사’ 하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을 ‘차수별 계약’이라고 부른다.

반면 계속비 예산으로 다년도 예산금액이 안정적으로 제공된다면 사업 집행자는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총공사와 연차별 공사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획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따라서 총사업비와 연부액이 계약서에 명시되지만 수년간의 공사내용이 단 한 차례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기에 ‘일괄계약’이 가능하다. 이러한 일괄계약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속비 계약’이라 하는데,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은 반드시 ‘계속비 계약’으로 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1조와 시행령 제69조).

다년도 사업을 계속비 예산 하에서 ‘일괄계약’으로 집행하는 방법과 매년의 예산범위 내에서 ‘차수별 계약’으로 집행하는 방법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이의 대답은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한국에서 계속비 예산이 급감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한다. 단년도 예산의 차수별 계약이 계속비 예산의 일괄계약보다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사회 현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이전에 ‘왜 그 행동이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한다.

5) 김강수 외(2023), 「탄력적 SOC 예산지출을 위한 계속비 제도개선 연구」, 2023년 8월, 한국개발연구원, p.60 참조

| 장기계속공사와 예산의 분산 편성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사례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예산편성 방법을 비교하며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매년 300억 원의 예산을 6년간 가용하고, 이 1,800억 원의 예산으로 각각의 사업비가 600억 원인 사업 A, B, C를 수행하며, 각 사업은 매년 50%의 진도로 2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된다. 첫 번째 예산편성 방법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완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첫 2개년도에는 사업 A를, 두 번째 2개년도에는 사업 B를, 세 번째 2개년도에는 사업 C를 순차적으로 완공한다. 두 번째 예산편성 방법은 세 개의 사업 모두를 동시에 착공하고 동시에 준공하는 것이다. 매년 300억 원의 예산을 3개의 사업에 100억 원씩 분산하여 편성하면 6차 연도에 모든 사업이 동시에 완공된다.

계속비 예산은 사업비를 전액편성하는 방식이기에 첫 번째의 '완공위주 집중편성'을 지향한다. 반면 장기계속공사는 매년 제공되는 예산에 따라 차수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의 '나눠갖기 분산편성'을 가능하게 한다. 더구나 장기계속공사에서는 연간 예산 300억 원 중 일부를 다른 신규사업에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사업 D, E, F가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는 한정된 예산 하에서 수많은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그러나 모든 사업의 완공을 지체하는- 예산편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장기계속계약을 통한 차수별 계약은 계속비 예산의 일괄계약에 비해 수많은 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정치적 요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업의 준비보다는 사업의 착공이 정치인들의 득표에 훨씬 더 유리한데, 이러한 요구는 한 번 충족되기 시작하면 가일층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러한 정치적 요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경제적 희생을 치르고 있는가? 정치적 요구와 경제적 이익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적 희생의 규모를 적절히 평가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요구는 과도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1999년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는 예산의 분산편성이 초래할 사회적 폐해를 시설물의 완공지연, 사업비 증액의 가속화, 완공 시기의 합리적 예측 불가, 정치적 논리에 의한 신규 사업 남발 등으로 지적하였다.⁶⁾ 1995년의 보고서에서는 분산편성의 사회적 손실이 총사업비의 17%에 달한다고 추정한 바도 있다.⁷⁾ 그런데 이로부터 30여 년이 지나 2023년에 발간된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는 이들을 망각한 채 -물론 1999년의 보고서는 최근까지도 비공개이지만-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가 사업비 증액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고만 지적하고 있다.

12월호에서는 해외사례와 비교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6) 김재형 외(1999) 참조

7) 옥동석(1995), 「정부대형사업의 선택과 예산편성」, 연구자료 95-20, 기타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참조. 여기서는 1976~2004년의 24년 동안 시행된 216개 시설사업을 대상으로 분산편성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추정하였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대한민국은 ‘고령 친화 사회’의 준비가 되어있는가?

장석영 김포대학교 사회복지 전공 교수, 치매케어학회 이사



진행 중인 현실의 부담

대한민국의 인구통계 현주소는 사실상 암울하다고 볼 수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으면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또는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단순히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고 해서 암울하다는 것이 아니다. OECD 만년 1등을 기록 중인 노인빈곤율과(OECD 평균 3배) 0.7대를 기록 중인 낮은 출산율, 생산연령 감소에 따른 노인 부양비는, 2040년이 되면 기존 39.9명의 총부양비가 79.5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한다고 지표가 말하고 있다.

고령사회 진입은 대한민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산업혁명 시대를 겪으며 베이비 붐을 일으켰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다만 그들과 달리 우리가 유독 힘들게 느끼는 것은 이를 뒷받침할 젊은 세대의 생산인력이 부족하여 각종 복지에 쓰일 재정과 기술, 돌봄 인력 등의 난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정책의 부재가 아닌 정책의 원동력이 약해서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도 사실 아직 사람들은 초고령-저출산 사회가 미치는 현실을 크게 체감하고 있지는 않다. 각종 통계나 언론에서 지겹도록 나오는 수치들에 둔감해진 것도 있겠으나 더욱 경각심을 갖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지금의 고령사회 증진이 향후 2050년 정점을 찍고 2070년까지 이르도록 계속되는 정해진 현실이라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가장 중점적으로 돌봄 정책의 강화, 노인빈곤 탈피를 위한 연금 소득대체율 증가, 민-관-학의 학제적 통합 해결책 마련일 것이다.

돌봄 수요의 증가

현대의학과 과학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실 상 아무 질병 없이 독립적인 100세 시대는 아직 요원한 일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신체·정신적인 기능 저하로 돌봄이 있어야 하는 수요 인구의 증가와 일맥상통하는 문제이며, 현재와 미래에 고령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8년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든든한 자리매김에 있다. 노인을 위한 돌봄의 경제적, 신체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건강보험 제도 안의 귀속 보험으로, ‘장기요양인 전 등급’을 받게 되면 크게 ‘재가 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나누어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수 역시 2016~2022년 사이 32.3%가 증가하였고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요 증가에 따른 요양원, 주야간 보호센터 같은 공급자 역할의 시설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돌봄을 주제로 한 사회복지 현장에 두 가지의 키워드가 큰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첫째는 ‘Aging in Place’(AIP)로 돌봄 수요자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생을 마감하기보다는 최대한 집과 같이 살던 곳에서 배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계적인 패러다임이다. AIP 정책에 맞춰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방향 역시 집으로 요양보호사를 요청하여 배려받는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의료 등이 더욱 활성화되고 보험 수가의 비율도 재가 서비스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현실적인 AIP 실현을 위해 AI 돌봄 로봇, 정서 지원 프로그램, 신체 보조 로봇, 첨단 ICT 기술이 도입된 제품들이 앞다퉈 개발되고 있다. 그렇다면 ‘AIP’는 앞으로 펼쳐질 초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할 이상적인 대안일까?

2023년 통계를 보면 국내 재가센터의 수는 2,200개가 넘고, 입소 형 요양 시설은 8,000개가 넘는다. 현재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노인의 수도 110만 명을 넘어섰고 노인성 질환의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는 악재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노인들은 먹기, 씻기,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같은 ‘기본일상생활동작’조차 쉽지 않으며 평소 혼자 하다가도 단 한 번의 넘어짐으로 크게 손상당할 수 있는 고위험군이라는 사실이다. 즉 초기 단계 치매 및 돌봄 수요자의 경우 AIP의 의미가 클 것이나 고령자의 기능 약화가 기정사실인 이상 요양 시설의 케어 역량 강화 및 지원도 동일하게 증진하는 정책의 유지가 바람직할 것이다.

실용적인 ‘AIP’ 정책을 위해선 돌봄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개조를 위한 노인복지법, 건축법, 장애인편의시설지원 관련 법 등의 유연한 개정이 필요하며 인체공학기술, 작업치료사, 건축 분야 전문가의 연계를 통해 돌봄 노인 개개인에 맞춤형 안전생활 공간 마련이 중요할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은 현실에 부합하는 수준의 지원을 통해 개조를 독려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기존 요양보호사 외에 지역 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충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는 요보호자를 발굴하여 적절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보공단 자체 조사 통계에서도 밝혀졌듯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중 70% 이상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홍보 및 교육의 부족으로 인해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지역 센터 내 교육을 활성화하고 TV, 라디오에 공익광고 홍보를 더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는 ‘돌봄통합정책’이다. 2026년 새로운 정책과 시행령 등을 갖추어 시작되는 돌봄통합정책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있어야 하는 우리 사회 취약계층 모두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대대적인 시행정책이다. 기존 70억 원대의 예산을 707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늘려 지원내용을 확대하고, 정책을 추가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몸이 불편해 병원 내원이 힘든 수요자를 위해 의료진이 집으로 방문하여 진료 및 치료하는 것과 방문재활치료, 방문 요양 강화, 첨단 돌봄 장비 지원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단순히 행정통합을 넘어 현장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태백 의료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비용 지원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 횟수나 지원금액이 여유롭지 않으며 단순 진찰만으로는 진단하고 처방할 수 없는 병이 더 많다.

일부 산간지방이나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을 위한 원격의료 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 또한 방문재활의 경우도 이미 면허증 소지자인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의 의료행위를 의료법상 의사의 지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제한을 가져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의사의 처방, 지도, 의뢰로 내용을 고쳐 특정 계층의 독점적 제한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방문 요양과 같은 재가 서비스 역시 기존 서비스 제공 시간을 하루 3시간에서 두 배로 늘린다 해도 기저귀 케어나 체위변경이 필요한 24시간 돌봄 수요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첨단 돌봄 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재가 서비스 강화 정책만 몰두하지 말고 더욱더 빠르고 효율적인 요양시설 서비스 제공도 같이 공유하는 균형적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또 다른 기회의 순간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이 사회적 문제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여러 분야의 연구와 협력, 신동력 창출이 만들어지는 긍정적 산업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바로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 시장 규모의 증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마치 생물과도 같은 유기적 산업시장은 다가올 미래를 예상하여 실물로 반영하기에 지금의 고령친화산업 확산이 고령사회에 미리 초점을 맞춰 준비된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국내 고령친화산업 9대 산업 분야를 보면 ‘고령친화제조업’ 분야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용품이 약 20조 원 규모를 이루고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고령친화서비스’ 분야의 여가, 주거, 금융, 요양서비스 등이 약 47조 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가오는 2027년이면 이 규모는 170조 원가량의 대규모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시장의 확대와 함께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장 큰 규모의 ‘고령친화금융 시장’은 33.5%를 차지하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돈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하기 힘들다는 불안감에 힘입어 연금 저축 상품 등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요양서비스 산업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굴직한 생명보험회사, 제약회사들이 앞다퉈 요양 시설 산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본연의 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상품 개발 및 판매에 돌입하고 있다. 건강의료품 역시 제조업 분야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건강 문제를 변함없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산업의 빠른 변화에 과연 정책지원 상황은 어떨까? 정부는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를 확대 운영하며 소비자 맞춤 정보 제공 및 중앙정부 연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그 수가 미비하여 더 많은 확충이 필요하다. 또 36개 고령 친화 우수제품을 선정하여 기업 성과보수를 지원하거나 고령친화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그 내실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소비자는 자식과 같은 보호자일 수 있으나 실제 수요자인 고령자의 다양한 개별성과 특성에 맞춰지지 못한 제품들이 성급하게 쏟아져 나오고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을 받아 그냥 소비되는 현실도 만연하다. 수요가 급증하는 시장을 먹잇감으로만 보지 말고 실제 현장의 소리와 실용성 위주의 제품 개발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는 제품은 민간현장과 정부 그리고 학계 연구가 함께하는 학제적 노력의 결과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 갖춰졌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시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무분별한 경쟁으로 인한 ‘상생(相生) 아닌 상사(相死)’ 하는 일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토론토

가장 이주하고 싶은 도시가 되기까지

글·한지혜 서울연구원 미래공간연구실 연구위원

토론토는 현재 이민자 유입을 기반으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국제적인 대도시로 명성이 자자하다. 서울을 포함한 뉴욕, 도쿄 등 일부 세계 대도시에서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는 2025년 현재에도 이민자 유입과 인구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캐나다 통계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캐나다로 유입된 50만 명의 이민자 중 약 25%가 토론토를 선택했다. 무엇이 이토록 이민자들이 토론토를 매력적으로 여기게 하는 것일까? 이는 토론토에서 누릴 수 있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한 높은 포용성과 다양성, 그리고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는 취업 기회 덕분이다. 이와 같은 토론토의 매력적인 특성은 수많은 역사적 사건과 캐나다 및 토론토 정부의 정책을 토대로 일궈졌다.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은

어떻게 캐나다 토론토를 대표하는 가치가 되었나

토론토 역사의 본격적 시작은 영국령이 된 18세기 후반부터다. 수 세기 동안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정착지였던 토론토의 존재는 프랑스인 탐험가 에티엔 브루리(Etienne Brule)가 1615년 첫발을 내디디면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이후 프랑스에서 모피 교역소 등을 세우며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했으나 곧 7년 전쟁이 발발하며 실패로 돌아간다. 7년 전쟁이 끝나고 토론토 일대가 승전국인 영국의 영토로 편입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토론토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토론토는 영국계, 아일랜드계, 아프리카계 등 다양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며 성장하기 시작했다. 영국계 이민자들은 영국령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발한 미국 독립 전쟁으로 미국에서 쫓기듯 도망쳐 온 약 10만 명의 영국계 충성파들이 토론토 일대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면서 다수 유입되었다.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은 토론토 인구수를 넘는 규모의 아일랜드인들이 1847년에 대기근을 피해 토론토에 자리 잡으면서 유입되었으며, 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은 노예 제도 폐지에 우호적이었던 지역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미국에서 탈출해 정착하는 과정에서 유입되었다.

이후로도 대규모의 이민자 유입이 있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다. 캐나다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증가한 노동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전쟁으로 황폐해진 유럽에서 발생한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실제로 전쟁 이후 캐나다 경제는 호황을 이뤘고 제조업, 건설업, 농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노동력이 부족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민자들이 채웠다. 캐나다 내에서도 전후 주택 건설 붐 등으로 일자리가 풍부했던 토론토에 특히나 더 많은 이민자가 몰렸고, 이미 형성돼 있던 민족 커뮤니티와 새로 유입된 이민자들에 의해 형성된 커뮤니티는 그들의 토론토 정착을 도왔다.¹⁾

이상의 역사를 거치며 토론토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모여드는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했다. 그리고 토론토는 그런 정체성을 살려 자국 내 여러 문화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공존을 도모하

며 더 나아가 소수 문화를 장려하는, 다문화주의를 세계 최초로 국가 경영의 기본 이념으로 삼은 캐나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지금까지도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민자를 환영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토론토는 현재 세계 경제 허브로서 포용성과 다양성이란 강점을 보유한 도시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이주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머서(Mercer) 컨설팅 회사는 2024년 토론토의 삶의 질 도시 순위를 세계 241개 도시 중 12위로 평가하기도 했다.²⁾

1) Howarth and McGillivray, 2025.11.1, "History of Toronto",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place/Toronto/History>

2) Mercer, 2024, "2024 삶의 질 도시 순위". Mercer 홈페이지, <https://www.mercer.com/ko-kr/insights/total-rewards/talent-mobility-insights/quality-of-living-city-ranking/#city-ranking>



토론토, 다양성·포용성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친환경 기회 창출

토론토는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다문화사회이면서 매년 신규 이민자들이 유입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를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민자 유입을 지속시킬 대안을 고민해야 했다. 즉, 양질의 일자리를 끊임없이 만들고 계속되는 도시화로 악화하는 도시 내 녹지공간 축소, 열섬현상 발생, 탄소배출 증가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숙제를 항상 안고 있었다. 이에, 토론토는 일찍부터 경제성장과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정책에 주목했다.³⁾

구체적으로, 토론토는 다양한 ‘친환경 기회(Green Opportunity)’를 창출하는 정책을 21세기 이후로 지속하고 있다. 이미 2000년대부터 토론토는 ‘깨끗하고, 푸르며, 건강한 토론토의 지속 가능한 환경

계획(Clean, Green and Healthy-A Plan for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Toronto)’을 발표하며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해당 계획에 따라 주거용 폐기물이 재활용, 소각, 매립 등 다른 형태로 전환되는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분리수거 프로그램의 도입,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의 폐기물 관리 정책을 펼쳤다. 또한 그린루프(Green Roof) 정책도 추진했는데, 이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확장할 때 일정 면적 이상의 지붕 공간에 식물을 식재하도록 법제화하고 그린루프 설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골자로 했다. 에너지 정책도 이루어졌다. 토론토 도심의 펄 스트리트 발전소의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고 온타리오 호수의 물을 활용하는 저탄소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했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략(Toronto’s Sustainable Energy)’을 발표하고 석탄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지원하기도 했다.

3) 고한나, 2018.8.22, “그린루프 정책, 지역산업 발전·도시조망 개선 효과”, 『세계도시정책동향』 서울연구원, <https://www.si.re.kr/bbs/vi-ew.do?key=2024100040&pstSn=1808220014>



2010년대 들어서는 토론토 그린 스탠더드(TGS, Toronto Green Standard)를 도입해 신규 개발에 대한 지속 가능한 설계 요건을 강화하고 친환경 기회 창출 정책의 범위를 교통 및 자연환경 분야까지 확장했다. 토론토 그린 스탠더드는 2010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신축 건물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상수도 소비량 등을 절감하기 위해 신규 개발 프로젝트가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1단계 기준(Tier1)과 정부의 재정 지원을 위해 만족해야 하는 상위 단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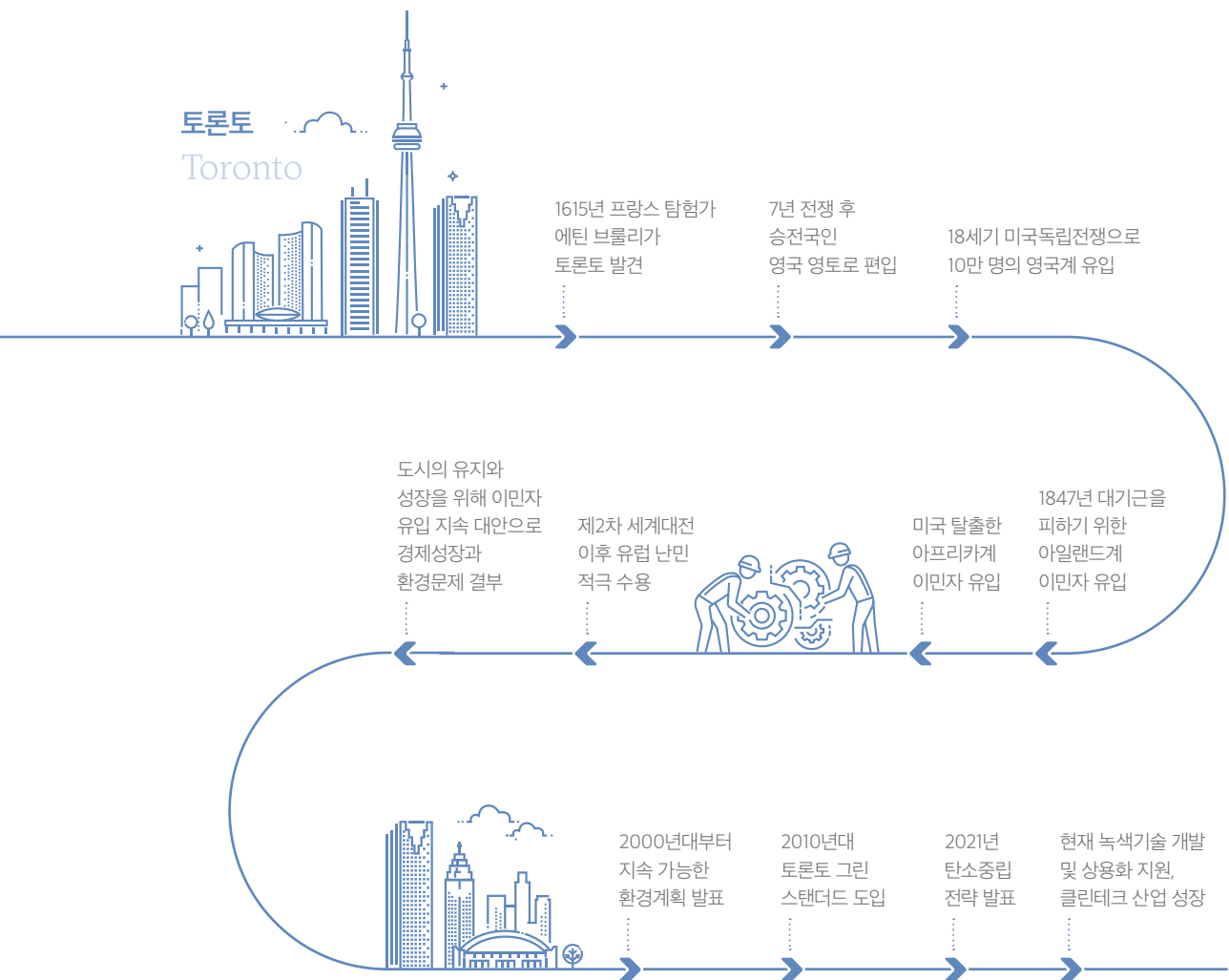
(Tier2-4)을 제시했다. 새롭게 추진되기 시작한 교통 분야 정책으로는 대중교통 확충,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전기차 전환 지원 등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추진된 자연환경 분야 정책은 산업체에서 배출하는 유독성 오염물질을 추적 및 보고하는 켐트랙(ChemTRAC)의 운영, 도시 내 녹지공간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일련의 사업 추진, 생물다양성 및 수분 매개자 보호 전략의 마련 등이었다.

이런 토론토의 친환경 기회 창출 노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21년 토론토는 ‘탄소중립 전략(Transform TO Net Zero Strategy)’을 발표하며 목표연도까지 도시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넷제로로 줄이기 위한 건축물, 에너지, 교통, 폐기물, 녹색산업 등 핵심 분야별 실행 계획을 마련하였다.⁴⁾ 해당 계획에 따라 현재 토론토는 건축물 분야 정책으로 건물의 난방 및 온수 공급에 사용되는 화석연료량 감축, 제로에너지 건축물 신축 활성화,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발전과 폐기물을 활용한 재생 천연가스 생산을 늘려 지역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탄력적인 에너지망을 구축하고자 힘쓰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우선 구역을 확대하고 급행버스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의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5km 미만의 거리는 도보 또는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제품의 재사용과 수리를 강조하는 제로 폐기물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도시 숲 조성 등을 통해 도심 내 탄소 흡수원을 늘리고 있다.

4) City of Toronto, 2021, Transform To Net Zero Strategy.

마지막으로 토론토는 그동안과 달리 녹색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 녹색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녹색기술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인큐베이터 프로그램과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운영하고 관련 연구개발 및 기업에 대한 투자와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클린

테크 산업이 토론토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현재 온타리오주에 위치한 클린테크 기업의 약 20%가 토론토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토론토는 주요 클린테크 세부 분야인 에너지 저장,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효율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⁵⁾



5) 김지호, 2025.7.1, “캐나다 클린테크 산업 대전환 본격화에 따른 진출 전략”, 『KOTRA해외시장뉴스』 Kotra, https://dream.kotra.or.kr/kotrane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231255



서울 남산공원에 위치한 퇴계 이황 동상
(1970.10.20. 설치)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은
참된 삶이 아니다

퇴계 이황

서울 남산공원 여섯 위인 연재
다섯 번째 이야기

글·조수빈 재정정보분석센터 청년인턴

* 서울 남산공원의 여섯위인 섹션은
청년인턴과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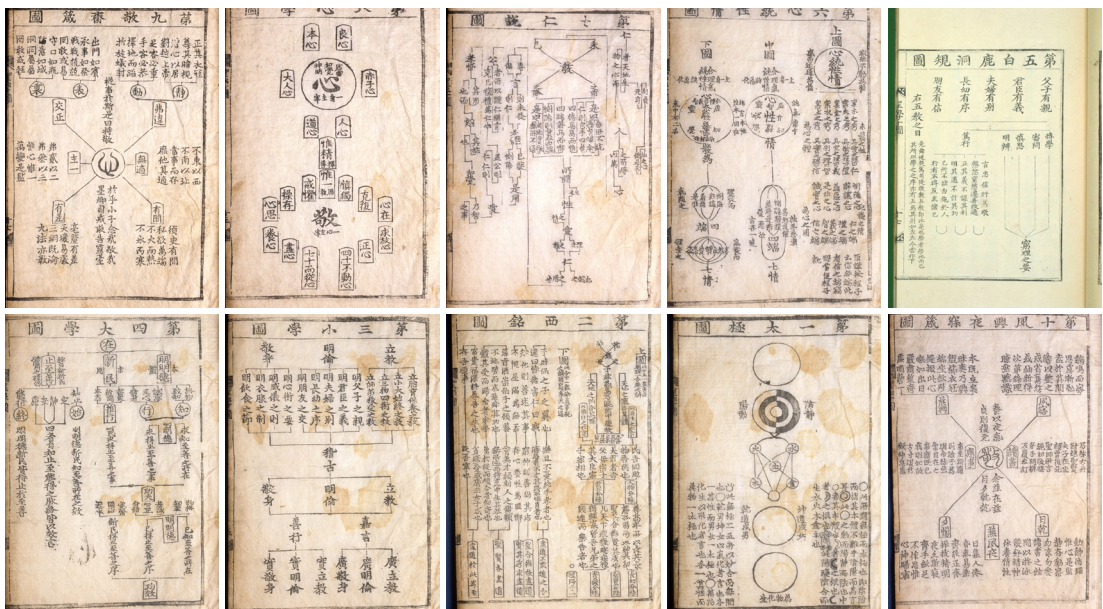
이 말씀은 지식이란 머릿속에 쌓아두는 데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고, 반드시 삶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퇴계 이황의 학문관을 압축한다. 퇴계는 평생 이 신념을 지켰으며, 말보다 실천으로 그 가치를 증명하고자 했다.

조선 전기의 대표적 학자이자 문인이었던 그는 1534년 문과에 급제한 후 성균관 대사성, 대제학 등 요직을 지냈다. 이후 그의 넷째 형인 이해가 을사사화(1545년)를 주도한 이기(李芑)와 관련되는 사건을 겪으며 정치에 회의를 느끼고 벼슬을 내려놓았고, 고향 도산으로 돌아가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전념하였다. 1561년 후학 양성을 위한 도산서당을 완공하였으며 그의 사후 1574년 도산서원이 설립되었고 이 도산서원이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의 학문은 깊은 성찰과 실천의 결합이었다. 「주자대전」, 「심경부주」를 비롯한 수많은 성리학 고전을 깊이 탐구했으며, 기대승과 벌인 사단칠정 논쟁을 통해 인간의 마음과 도덕 원리에 대해 치열하게 성찰했다. 그의 탐구는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삶의 도덕적 지침을 세우고, 앎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과정이었다. 그의 제자들이 형성한 영남학파는 이러한 실천적 학문의 전통을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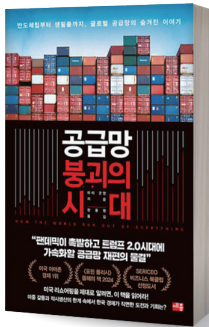
1568년에 집필한 「무진육조소」에서는 군주가 지켜야 할 도덕과 정치의 원칙을 제시했고, 「성학십도」에서는 어린 임금에게 도덕적 수양이 나라의 기틀임을 일깨웠다. 그의 글은 단순한 학설이 아니라, 군주가 직접 실천해야 할 지침이었다. 그의 학문이 곧 정치적 행위였던 것이다.

그의 행적을 보면 참된 앎이란 관직의 권세가 아니라 도덕적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삶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학문을 실천으로 연결한 그의 자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천 원권 지폐에서 그를 만나볼 수 있는 이유다. 퇴계는 지식이 곧 삶을 바꾸는 힘을 품소 증명했으며, 그 정신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로 남아 있다.



성학십도 | 이황이 1568년 12월 왕에게 올린 상소문이다. 선조가 성군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군왕의 도에 관한 학문의 요체를 도식으로 설명하였다. 순서대로 태극도, 서명도, 소학도, 대학도, 백록동구도, 심통성정도, 인설도, 심학도, 경제집도, 속흥야매잠도이다.

시각 전환, 미래 전환



「공급망 붕괴의 시대」

피너 S. 콧맨 지음 | 세종서적

이 책은?

트럼프 2.0 시대에 가속할 공급망 재편
미국 리쇼어링과 남미의 니어쇼어링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는 ‘모든 것이 부족한 시대’에 직면했다. 식품, 반도체, 차량, 원자재 등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물자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며 글로벌 공급망의 허약성이 드러났다. 이 책은 뉴욕타임스 경제 전문 기자인 저자가 중국 Ningbo항부터 미국, 남미까지 세계 각지의 산업 현장을 직접 취재해 ‘저비용·고효율’에 집착한 세계화 체계가 어떻게 스스로를 붕괴시켰는지를 날카롭게 짚는다. 저자는 단순히 팬데믹이 아닌, 수십 년간 누적된 ‘극단적 효율성’이 초래한 구조적 위기를 폭로하며,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제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 책의

핵심 보감

寶鑑

돈에 대한 착각을 버리고 세우는 8단계 실행 전략

1. 저비용이 만든 세계의 덫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비 절감을 위해 공급망을 전 세계로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의존 확산이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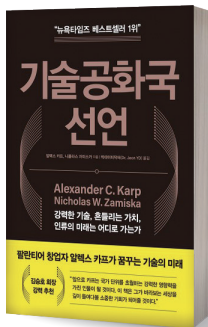
2. 적시 생산의 효율은 진짜일까

재고를 최소화하는 일본식 적시 생산은 위기 상황에서는 공급 단절로 이어지는 최대의 리스크가 되었다.

3. 앞으로는 안정성의 경제학에 따를 것

효율성에서 유연성으로의 전환이 기업 생존의 관건이 될 것이며, 저비용이 아닌 안전성, 분산, 윤리적 생산이 핵심 기준이 될 것이다.

팬데믹 이후로 경제를 비롯한 세계정세의 변화와
기존의 규칙이 무너지는 그 흐름과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 변화의 흐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기술공화국 선언」

알렉스 카프, 니콜라스 자미스카 지음 | 지식노마드

이 책은?

기술로 시작해 다시 기술로 나아가는
서구 사회의 쇠퇴를 돌아보는 성찰

이 책은 기술 만능주의 이면을 들여다본다. 기업 팔란티어의 CEO와 법률 고문인 두 저자는 미국을 이끈 힘인 기술이 무너지는 순간 서구 문명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진단한다. 이를 통해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위한 도구 또는 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보고 이 기술 산업이 국가의 중심에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결국 기술은 국가와 공동의 가치, 공공의 선과 연결되어 소비와 편의 위주에서 벗어날 때, 그 전환이 앞으로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제시한다.

이 책의 핵심 보감 寶鑑

- “왜 만드는가”의 질문이 중요하다: 혁신 자체보다는 혁신의 방향성, 목적이 놓여야 한다.
- 소비 중심으로 치우친 기술생태계의 리스크: 많은 자본·인재가 소비자 편의·앱 중심으로 결집돼, 정작 국가·문명적 도전은 뒤로 밀렸다.
- 국가·기업·기술의 삼각관계 재정립: 기술 기업은 단순히 시장 참여자가 아니라 국가안보·문명 유지라는 맥락 속에 재배치돼야 한다.
- 가치 없이 기술만으로는 지속 불가: 기술적 우위만으로는 문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공유된 신념·문화적 자본이 필요하다.

부정수급 현장점검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고보조사업의 부정수급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결과에 따라 점검 필요 대상을 식별·통보하여 현장점검을 지원합니다.

부정수급 모니터링 개요



e나라도움은 부정징후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사업을 추출 후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통보**

모니터링에 탐지된 내역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집행 모든 내역에 대해 점검

부처 자체점검 또는 합동 현장점검
(기획재정부, 부처, 재정정보원, 회계법인) 실시

중앙관서의 장은 지침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의2,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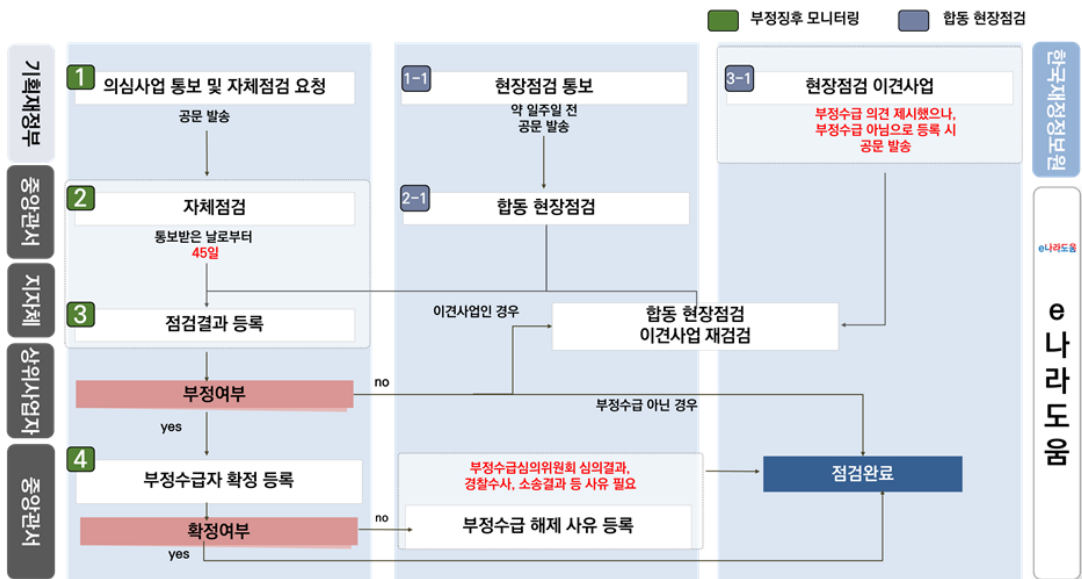
부정수급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부정수급 현장점검 업무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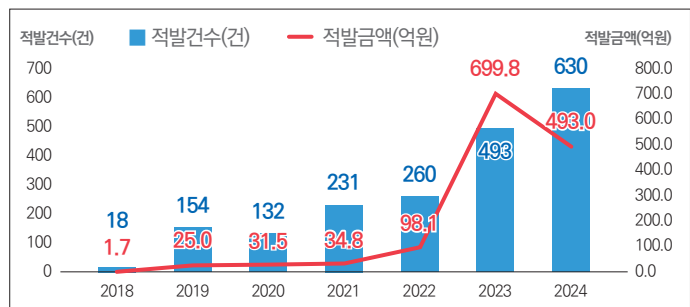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징후의심 사업 모니터링 실시



부정수급 모니터링 결과

- 2024년 총 8,079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의심사업결과 추출·점검(기획재정부 합동 현장점검 450건, 특별점검 60건)
- 이 중 630건의 보조사업에 대해 493.0억 원의 부정수급액 적발



주) '23년 699.8억원 중 318.9억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기부에서 자체 신고등록

FIS NEWS



역사전문가 최태성 강사 보훈특강

- 남산공원 위인 동상 연계 '기억하는 정원'운동으로 보훈문화 확산 -

한국재정정보원(원장 윤석호)은 남산에 설치된 위인 동상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참여할 수 있는 「기억하는 정원」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운동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위인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오늘의 삶으로 이어가는 사회 공헌 모델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애국가 구절에도 나오는 남산은 일제강점기에 조선 신궁이 세워져 국민들이 강제 참배를 했던 아픈 역사의 현장으로 현재는 김유신 장군, 성재 이시영, 백범 김구, 안중근 의사, 다산 정약용, 퇴계 이황 등 위인의 동상이 세워진 보훈의 공간이다. 한국재정정보원은 해당 공간을 활용하여 위인들을 위한 추모 화분 설치, 사이버 추모관 구축 및 운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기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30일, 역사 전문가 최태성 강사를 초청해 국가보훈부와 보훈교육연구원이 주관하는 공공기관 재직자의 보훈의식과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2025 차이 나는 보훈특강」을 개최했다. 그리고 '차가운 동상, 뜨거운 역사'를 주제로 남산 위인 동상과 연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을 재조명하며, 위인들의 헌신을 오늘날의 사회적 책임으로 계승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윤석호 원장은 "위인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정신을 기억하고 실천하겠다"라며, "한국재정정보원은 공공 디지털 재정 플랫폼 전문기관으로서 보훈문화 확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이버 안보도 함께 구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NH농협은행과 함께 추석 명절 맞아 어려운 이웃에 나눔 실천

한국재정정보원(원장 윤석호)과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립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후원품을 전달하였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재정정보원과 NH농협은행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협약'을 통해 적립한 재원으로 마련됐다.

윤석호 원장은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NH농협은행과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행사에 함께 해준 NH농협은행 공공금융부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재정정보원과 NH농협은행은 2021년부터 복지관 나눔 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실천해 오고 있다.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항상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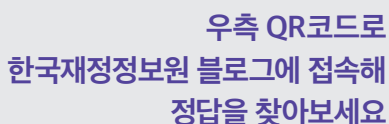
찾아라~ 한국재정정보원 숨은 정보!



Quiz

국가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기여금이나 보험료 등을 부과해 운용하는 재원은?**

- ① 사업성기금 ② 계정성기금
 - ③ 금융성기금 ④ 사회보장성기금



힌트



좌측 QR코드로 접속해
정답을 응모해 주세요.

*응모기간 2025.11.25.~12.15.



» 지난호 정답 : FIS재정도움센터

»» 지난호 퀴즈 당첨자

010-****- 1207

010-***- 5796

010-****- 8280

010-****- 2532

010-****- 3392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월간 『나라재정』에
숨겨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찾아 애독자 퀴즈 정답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국표의 추요기

王道政治의 표상

이 기록에는 임금이 백성의
근심과 기쁨이 담겨있다.

20
25

05
16 FRI

12
07 SUN

국립기상박물관
기획전시실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이 됩니다

산불은 오직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산불 예방 수칙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입산 금지**



산림 내에서
라이터, 담배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에서 예초기, 옹점
작업 시 **산불대책 강구**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 금지**



화목보일러
불씨 관리 철저



가꾸는데 30년
사라지는데 3초인 산불,
실수도 처벌 대상

“산에 불을 지른 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산림보호법」 제53조